

국무회의의 데뷔 오세훈, 첫 건의는 '공사가' 8

'신학철의 안전경영' LG화학 대규모 채용 13

코스피(13일) 3169.08(+33.49P) 코스닥 1010.37(+9.72P)
환율(달러당 원화) 1125.90(+1.0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138%(-0.002%p)

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 검증하자”

일본, 2년뒤 125만t 방출
“바다환경 위협하는 일방적인 결정 ‘강한 유감’ 국제재판소 제소 검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고려”

정부가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국제사회 검증 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3면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관계각료회의에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은 트리튬(삼중수소) 농도를 바닷물로 희석해 자국 기준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국내 수산업 및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기로 했다.

구 실장은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고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 방출이 문제가 있다는 게 입증되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오염수는 125만844톤에 달한다. 여기에는 장치로 걸러낼 수 없는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포함돼 있다. 삼중수소는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내부 피폭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실제 방출에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수 방출을 위해서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결정한 13일, 서울 도봉구 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 수산물코너에서 한 관계자가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SDI ‘제2 테슬라’ 맞손 美 전기차업체 배터리 공급

삼성SDI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

13일 관련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올해 전기 픽업트럭 R1T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R1S를 출시할 예정인 리비안은 삼성SDI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했다.

R.J.스캐린지 리비안 최고경영자(CEO)는 “리비안의 모듈-팩 설계가 적용되는 삼성SDI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리비안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출신의 스캐린지가 2009년 창업한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아마존, 포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리비안은 2018년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R1T와 R1S를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출시일이 올해로 지연됐다.

삼성SDI 관계자는 “리비안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해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발 묶는 G2, 손 놓은 정부 ‘K반도체’ 속 타는 줄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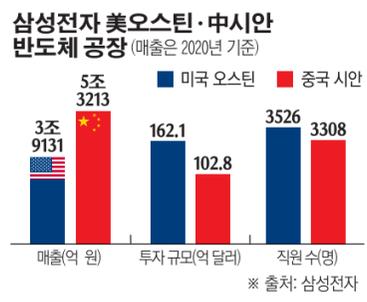
美·中 패권경쟁 속 투자압박 가속 “전략외교 기동 기업난제 풀어줘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와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에 끼여 좌불안석인데, 우리 정부는 변죽만 울릴 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4면

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주요 반도체-완성차 기업들과 최근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TSMC, HP, 인텔, 마이크론, 포드, GM 등 19개 반도체-자동차 분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도체를 안보적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온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를 드러내며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반도체 굴기를 꿈꿔온 중국 정부의 투자 압박도 여전하다.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사면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등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전체 수출량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홍콩까지 더해지면 수출 비중은 60%까지 올라간다.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확대 요구 중 어느 장단에 맞춰도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업계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반도체 공급난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더욱 예리한 각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고도 외교전략이 필요하지만, 기업에 맡겨 놓고 사실상 손놓은 형국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최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도 완성차-반도체 기업을 모아놓고 ‘한번 알아서 해봐라’라고 액션만 취하는 모양새인데, 이보다는 고도의 외교전략으로 반도체기업들의 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 가게가 전부인 당신에게 내 가게에서 모두 가능해지도록

i-ONE 소상공인

i-ONE 소상공인 |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플랫폼
기업·개인 통합뱅킹부터 전문가의 사업정보까지 앱 하나로 누리세요!

기업·개인 통합뱅킹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통합 계좌 관리	대출·기간연장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 신청 (단, 개별 SMS 통지 받은 고객에 한함)	전문적인 사업정보 소상공인 맞춤 전문 지식과 정책자금 정보 제공	경영 지원 세무 지원 및 거래처 관리 등 효율적 경영 업무 지원
--	---	---	---

초저금리대출 기간연장 하고 다양한 혜택 받기

IBK기업은행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BK이온뱅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기간: 2021년 4월 14일(수) 09:00 ~ 2021년 4월 15일(목) 09:00. *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99-2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가입 후 만원이 있을 경우 자동 원리금, 금융소비자지원센터(030-000-4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점 방문 통해 신청한 경우만 만원특별사영이 있는 한 14일간 만 14일 차이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 연장이 이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만원특별사영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만 원과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BK이온뱅크는 금융회법을 받지 않습니다. * 운영명: IBK기업은행. *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00, e-mail: bkb@ibk.co.kr

연기금, 주식 6조 판다

자산 주식 비중 19.8% 목표 추가 매도에 동학개미 '쏟을'

6조원.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연기금이 추가로 시장에 던질 수 있는 주식 액수다. 동학개미(개인투자자) 원성이 커지자 연기금 만행면 격인 국민연금이 자산 재조정을 했지만, 증시에 지원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DB금융투자가 국민연금 투자자산을 분석한 결과, 자산 가격 상승을 고려한 투자자산은 856조5000억원이다. 이에 근거해 19.8%(전략적 자산배분 상단)까지 비중을 낮추려면 6조원가량 물량을 쏟아내야 한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 국내 주식은 179조9689억원어치로 기금 전체 자산(855조7280억원)의 21.0% 수준이다. 작년 말 21.2%에서 약간 줄었다. 증시 활황기였던 1월에 주식을 내다 판 결과다. 1월 한 달 연기금 등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조64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이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 차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연

기금의 장기간 국내주식 순매도와 관련해 공공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안정적 수익 추구 관점에서 전략적 자산배분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을 고려한 국내 주식 비중 허용 범위가 목표치(16.8%)의 ±2%인데 ±3%로 1%포인트 확대했다. 하지만, 올해 말 목표 비중은 '16.8%±5%'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한 국민연금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보유 목표를 맞추기 위해 당장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할 주식 물량은 줄었다.

신한금융투자 김다미·최유준 연구원은 최근 '연기금 수급 환경 분석'을 통해 '여유 자금 배분안에 따른 추가 유입액과 자산별 벤치마크 상승률(시장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매도할 국내 주식은 연초 대비 2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기금 등이 이미 16조원가량 순매도한 상태여서 환율·자산군별 가격 변동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중 추가 매도 금액은 3조~5조원 정도로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美·IAEA "기준부합 문제 없다" 전문가 "구체적 정보제공 안해 한국, 가처분 제소 준비 필요" 방류 앞서 환경 영향 평가해야

동아시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본의 13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미국 등 서구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크게 반발해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결정 과정은 투명했고 국제 안전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블룸버그통신과 포브스 등 주요 외신들마저 해당 결정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특히 "방사성 물질을 방류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을 겁먹게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옳은 행동을 통제해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일본 결정을 두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결정이 매우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194조 2항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이 한국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3월 11일	- 동일본대지진 ·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전원상실 및 폭발 사고 - 용융 핵연료 냉각수에 빗물 · 지하수 유입,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발생
2013년 3월 30일	오염수 정화처리 장치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운전 개시
9월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종합 대책
2016년 6월	전문가 회의, 오염수 처분 방법 5가지 검토안 중 해양방류 의견 공표
2020년 2월 26일	그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해양방류 지지 발언
9월 26일	스기 총리,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 정부 방침 지속 결정 언급
2021년 3월 23일	그로서 IAEA 사무총장, 오염수 처리 관련 전문적 협력 의사
4월 13일	일본 정부, 관계각료 회의에서 해양방류 결정
2023년~	약2년 준비 작업 거쳐 본격 방류(예상)

"현재 일본이 한국에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4조 이외에도 해양환경 오염에 대해 관련국에 통고할 의무를 규정한 198조와 해양환경에 오염이 미치는 영향이나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함을 규정한 204조, 관련 보고서 발간 규정인 205조와 해양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 평가를 규정한 206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류 중단 가처분 제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제 환경 변호사인 던컨 커리도 "일본의 결정은 한반도 관할 해역을 포함한 해

양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 206조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도 이날 비판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울러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일본 정부 측에 오염수를 방출하면 일본 시민과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하면서 연기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도 "바다는 인류 공동 재산으로 일본 내 문제가 아니다"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주변국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과 함께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음식점 문 닫으면서 '휘청' "매출 끊겨 생계 유지 곤란"

르포 사라지는 골목상권

② 황학동 주방 거리

"거리를 보세요. 사람이 없잖아요. 식당이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매출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쩌다가 온 손님도 깎아 달라고만 합니다."

13일 황학동 주방 거리는 투박한 쇠덩이들로 가득했다. 사람 키만한 중고 스테인리스 선반과 싱크대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한때는 주인의 애정을 받으며 요긴하게 쓰였을 제품들이다. 쌓인 물건 사이에 자리잡은 상인은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다. 점포를 기웃거리던 젊은 손님은 매대에 진열된 스테인리스 그릇을 집었다 내리기를 반복하다 결국 빈손으로 자리를 떴다.

황학동 주방 거리는 1980년대 중앙시장 뒤편에 자리잡은 중고 주방용품·가구 특화 거리로, 400여 개 업소가 모여 있다. 폐업한 식당의 중고 물건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도매시장이다. 전국 외식점 주방용기의 80%가 이곳에서 조달될 만큼 창업자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도 꼽힌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음식점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도 치명타를 입었다. 지난해에만 식당 7만5645개(지자체 인허가 받은 전국 190개 업종 기준)가 폐업했다.

17번째 중고 주방 그릇을 팔고 있는 김모 씨(64세)는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가 어려워 중고 시장이 호황이라고 말하는데 식당이 망하면 우리도 연쇄적으로 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지금은 (중고 용품) 매입이나 매매 거래도 거의 없어 힘든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선호와 온라인 중고 플랫폼의 등장은 이들을 더 고립시켰다. 방문 고객들은 인터넷 최저가를 운운하며 가격을 흥정한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용품들이 쌓여있다.

다. 한 푼이 아쉬운 점포 주인들은 마지 못해 최저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황학동에서 중고 주방용품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9세)는 "오는 손님마다 중고라며 계속 깎아 달라고 하는데 정말 힘들다"며 "그마저도 창업하겠다고 (대량 구매를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날개 용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또 "애초에 이곳은 발품 팔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비대면이나 온라인과는 거리가 먼 시장"이라며 "그런 건 젊은이들이나 하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푸념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다. 외식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4차 재난지원금(비밀목 자금 플러스) 관련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중고 가구점 주인 김모 씨(60세)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상대하는데 물건 거래에는 건당 부가세가 많이 붙어 세금은 훨씬 많이 낸다"며 "그런데도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별로 받지 못했는데 왜 노래방만 챙겨 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와중에 거리에 물건 내놨다고 구청에서 나와 벌금을 물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작년 매출이 40% 줄었는데 올해가 더 걱정"이라며 한숨만 쉬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일본 후쿠시마현청 앞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일본 정부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후쿠시마/교도연합뉴스

"피해 돌이킬수 없어, 강제적 수단 동원해야"

한·일 시민단체 강력 반발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내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활동가는 13일 "일본 정부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강제적인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반대하고 UN도 우려를 표명한 만큼 국제 공조로 압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2013년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을 주장해 왔지만 한국 등 주변국은 의문을 가졌다. 최 활동가는 "2013년에도 수산시장에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 8개 현에 대해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과 주변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 에프오이재팬(FoE Japan) 등은 전날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결정을 반대했다. 후쿠시마 현

단체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도 JR 후쿠시마역 앞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스즈키 가즈에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로 태평양을 의도적으로 오염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는 대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으로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리는 걸 선택했다"며 "후쿠시마와 인접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승인 등이 필요하다. 실제 방류는 2023년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은 30~40년 동안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석 기자 mystic@

“日 못 막으면 中도 방류...한반도 해역, 방사능 오염 우려”

‘세계 3위 원전국’ 중국, 55기 추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대부분 서해안과 맞닿아 직선거리로도 400km밖에 안돼 정부 ‘IAEA 검증 강화’ 대책 내놓자 전문가들 “실효없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약 125만 톤(지난해 기준)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국제적으로 인정할 경우 앞으로 중국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 방출을 막을 수 없어 한반도 해역 전역이 방사능 물질로 뒤덮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49기로 미국(94기), 프랑스(56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현재 11개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 중이고 건설 계획 중인 원전만 44기에 달한다. 또 지난해 11월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된 ‘14차 5개년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중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70GW(기가와트)로 늘리는 계획이 담겼다. 현재 51GW인 원전 용량을 급속도로 늘리는 것이다.

중국의 원전 대부분은 동해안 즉, 우리나라의 서해에 있다. 위도상 한반도와 같은 범위에 있는 중국 라오닝성, 산둥성, 저장성 북부에 원전 건설이 집중됐다. 최근엔 한국과 직선거리로 약 4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둥성 인근 서해에서 해상 원전을 띄워 시험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해상 원전을 ‘바다 위의 체르노빌’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적으로 허용될 경우 중국도 본격적으로 오염수 배출에 나설 것을 우려한다. 다수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저장 탱크보다 해양 방류 비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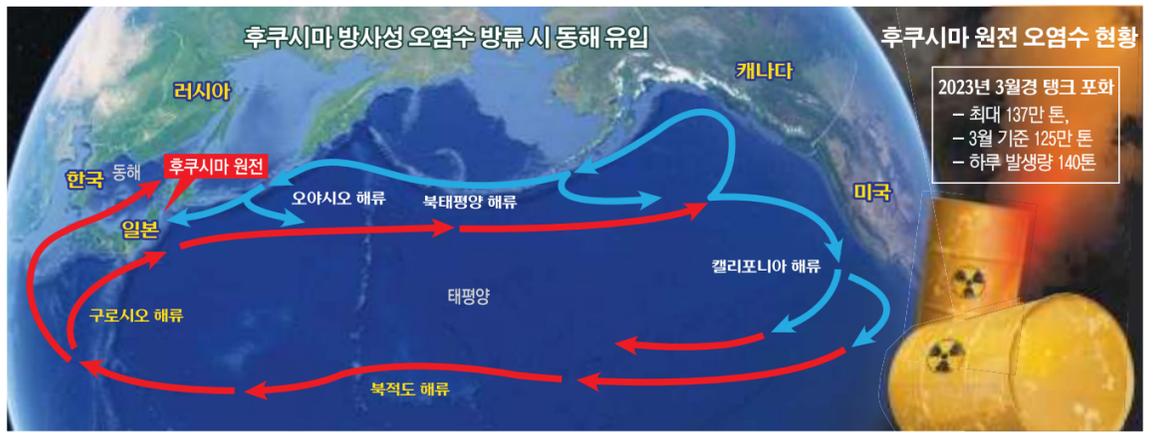
10분의 1 수준이라 중국 역시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현재도 저농도의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

중국은 이날 “관련 국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지 합부로 오염수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중국으로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서해는 외국에 있는 웬만한 큰 호수보다 작은 바다”라며 “중국에서 원전을 많이 짓고 있다 보니 방사능 물질을 방류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일본에 대한 외교적 항의나 규탄 외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IAEA는 조직의 원래 목적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핵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기구’다. 후쿠시마 사고는 물론이고 체르노빌 사고 등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으로 전 세계 탈핵 운동가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IAEA는 이날도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도 일본의 조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국제안전기준은 IAEA 같은 국제적인 기구에서 내놓은 기준이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 정의 특위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대책으로 IAEA와 공조하겠다는 말은 ‘오염수 방류를 그냥 용인하겠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
2023년 3월경 탱크 포화
- 최대 137만 톤,
- 3월 기준 125만 톤
- 하루 발생량 140톤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인체에 암 유발·유전자 변형 우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방사능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다. 일본은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을 기준치보다 낮은 1리터에 1500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배출 기준치는 리터당 6만 베크렐이고, 후쿠시마 원전 내

염수 삼중수소는 리터당 58만 베크렐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방사선인 베타선은 먹을 경우 내부 피폭될 수 있지만, 7~14일 이면 대소변과 땀으로 배출된다. 전문가들은 삼중수소가 암과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고, 수산물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한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전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는 “삼중수소는 인체에 암을 유발하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면 한반도 해역에 언제 도달하는지는 아직 정부 공식 연구가 없다. 다만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1년 안에, 정경대 오서니 해양환경연구소장은 5년 뒤에 도달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정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검토” 한일무역전쟁 재점화 조짐

日, WTO 제소 등 맞대응 예상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 간 무역 전쟁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현재 일본 산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실장은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도 일본 14개 현 27개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 실장은 “(수입금지를) 더 확대할지는 일본이 방류했을 때 상황을 보고 조치할 것”이라며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한국이 얼마든지 배상을 요구하거나 중단시키든지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도 “일본 측 진행 상황에 맞춰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는 해역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19년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또다시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패소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3종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한 일본을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두고 정부가 수입 금지를 확대할 경우 일본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에 돌입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수산물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한국 수산업 전반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금의모든순간 NH농협금융

오직, 140분(총책)에게만 허락된 기회!

INVITATION NH투자증권 ISA 특판(연) 14%RP (세전, 91만원까지)

지금, NH투자증권 ISA로 수수료 없는 주식거래의 절세혜택은 물론 14%RP 배당, 연 9% 수익률까지 한꺼번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이사(ISA) 가입 이벤트 (21.02.25 ~ 06.30)

- 01 이벤트 기간 중 중개형 ISA 가입 시,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완전 무료 (10만원부터 1천만원) *연 이후 수수료 약 0.084%~0.489% (연 1만 7천원)
- 02 총 140분(연) 14% (세전) 연 특판 RP 제공 1천만원 이상 가입 시 1천만원 한도 (연 1만 7천원)

확달라진 이사(ISA)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거주자 및 금융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거주자
- 의무보유기간: 3년
- 유형보유기간: 중개형 ISA 추가, 주식거래 추가
- 세제혜택: 수익의 200만원 한도 비과세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 연금 전환 혜택: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일인형 ISA 가입 시 별도의 신탁(일인)보수(연 0.1%~0.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ISA 가입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증권신탁,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 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수수료 적용 기간 이후 수수료는 약 0.084%~0.489%(연 1만 7천원) 기준, 거래금액별, 채보일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이078호(2021-03-04-2022-03-03) *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패권 탈환 美·기술 굴기 中 사이에 낀 韓은 전략 부재

글로벌 패권경쟁 뒷짐만

美, 500억 달러 투입 사업 육성
中 “2025년 자급률 70%” 선언
반도체 밸류체인 자립화 나설때
韓, 장밋빛 전망만 내놓다 빈손

반도체 산업 내 패권경쟁이 가열된 건 4차 산업혁명 때문이다. 대부분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의 원활한 공급이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이를 더욱 부각하는 하나의 '트리거' (방아쇠)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지원 정책의 초점은 결국 '반도체 밸류체인 자립화'로 모인다. 설계·제조·공급 과정을 모두 자국에서 할 수 있게끔 '현지화'하는 게 골자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500억 달러(약 56조50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입하는 것과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도체 속국으로 전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계 분야에선 강자지만, 제조 측면에선 동아시아권에 밀린다는 점을 들어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에 초점을 뒀다. 2030년까지 반도체 제조산업에서 미국의 비중을 24%까지 늘리고, 신규 공장(팹)도 20개 가까이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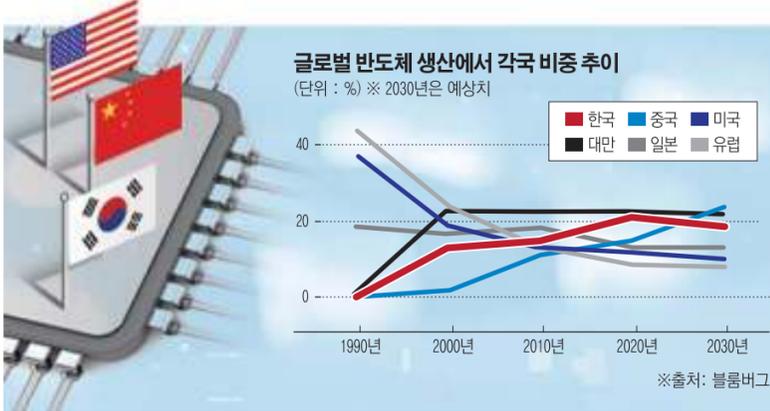
실제로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 밸류체인 비중은 10% 안팎으로, 전반적인 수요와 시장점유율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낮다.

중국은 SMIC 등 주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첨단공정 개발을 비롯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견제에 맞서 반도체 중고 장비들을 비싼 값에 싸들이고, 적극적인 헤드헌팅을 통해 국내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건 미국과 중국뿐 아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제품 중 20%를 EU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최대 66조 원의 지원금 보타리도 풀 계획이다. 일본도 직접 대만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요청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주요 국가들이 이같이 긴박하게 나선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굵뜨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건 올해 1월부터였지만, 당시 정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돌파가 기대된다'라는 등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살리곤 웨이퍼를 꺼내 들고 있다.

장밋빛 경제전망만 내놔다.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빚어질 경제 부작용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는 두 달 후인 3월이나 만들어졌다. 이미 전 세계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였다. 이달 9일엔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협회 회장단 회동도 열렸지만 "전략 마련 중", "민관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식의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다.

미국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을 진두지휘 중이지만 한국의 경우 산업부 중심으로, 그것도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해서만 일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형국이다.

업계에선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 다툼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제나 상존하는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짜야 한다는 뜻이다.

인력 양성과 세금 공제 등 기술과 관련한 지원책에 더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내 기업 입지를 조율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외교적 능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반도체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도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사업 타격 우려다. 전일 백악관 회의에 삼성전자가 참석

하면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현지 신규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반도체 굴기'를 꿈꿔온 중국 정부의 투자 압박까지 더해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는 부담은 더 커진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공장을 하나씩 더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씁쓸한 농담도 나온다"며 "미국 오스틴 공장 옆에 메모리 공장을 짓고, 중국 메모리 공장 옆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하나 더 짓는 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흥역을 한 번 앓았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선제적으로 전략을 준비하지 못한 점은 더욱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양준모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탈(脫)중국화와 밸류체인 변화가 가속화했지만, 국내에선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로 인한 자립화 과정에서 도리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부분이 있다"며 "산업 정책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전체 글로벌 밸류체인이 어떻게 돌아가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형세를 못 알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기업이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정치적 리스크에 시달리지 않게 적재적소의 지원책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정부 SOS에 난감한 삼성·하이닉스

“車 반도체 비중 5% 미만… 생산 늘리기 쉽지 않아”

국내 기업들 복잡한 속내

반도체 기업으로서 최근 일련의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할 말이 많다. 세트업체의 아우성과 각국 정부의 소집·협력 요청을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 비중은 작는데 정부의 'SOS 요청'이 계속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은 난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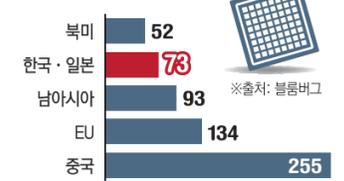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차량용 반도체의 98% 이상을 수입해서 사용해 왔다. 국내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도, 수요도 많지 않은데다 개발 단계도 더 복잡한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유인이 부족했던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사업에서 차량용 반도체 비중은 5% 미만으로 미미하다. 차량용 반도체는 한 번 공급하면 10년 이상 장기 생산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장기간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첨단 공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뒤처진 레거시(legacy) 공정을 사용하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것은 기존 기술 공정 흐름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통상 차량용 반도체는 28나노 제품을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된 공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다 털어내고 싸게 생산할 수 있어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앞선 공정으로 가는 마당에 레거시 공정을 상용하는 제품 생산을 늘리긴 어렵고, 이를 위해 별도의 라인을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인텔은 미국 정부와 거대한 자국 시장을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내 2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올해 글로벌 지역별 자동차 판매 손실 전망치



한 인텔의 팹 켈싱어 최고경영자(CEO)는 백악관이 주최한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6~9개월 이내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개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론 △차량용 반도체 수요와 공급 매치 △초기 사업단계를 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이 꼽힌다.

정만기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국내의 차량용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 노력은 늦은 감이 있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완성차업체와 팹리스, 파운드리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중호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장도 "공공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연구는 장기적으로 지원하되, 반도체 기업들에 완성차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리를 놔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가 1~3차 협력업체 5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는 성능이 같다면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품으로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팹리스 기업으로선 국내 완성차업체가 먼저 구매 물꼬를 터주면 수출길에 나서기도 쉬워진다. 이를 기반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변호선 기자 hsbun@

“車 반도체 공급 정상화까지 1~2년은 걸릴 것”

글로벌 수급 전망

MCU 납품기간 2배 이상 늘어나
스마트폰·가전까지 제조업 차질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산업계와의 '반도체 화상 회의'를

여는 등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짧은 기간 내에 생산을 늘릴 마땅한 방도가 없는 탓이다.

가장 심각한 차량용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가전 등 전 분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확산하며 글로벌 제조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해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는 8인치 웨이퍼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8인치 장비에 투자하려 해도 파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12인치 웨이퍼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투자와 가동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해결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CEO(최고 경영자) 출신인 진대제 스카이라이프 회장도 지난달 말 전경련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세미나에서 반도체 수급 안정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진 회장은 "안전을 담보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품질을 보장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다시 원활해지려면 1~2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했다.

세계 3위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톰 콜펠드 CEO 역시 경제매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산업동향보고서에서 "최근 수급 차질이 가장 큰 품목은 차량의 전장 시스템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MCU)"이라며 "대만

TSMC의 반도체 주문 폭주로 MCU 생산 리드 타임(발주부터 납품까지의 소요시간)이 기존 12~16주에서 26주~38주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TSMC는 전 세계 MCU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확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회복 등 반도체 수요 확대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이 파운드리(칩 위탁생산) 투자를 확대하고 각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 정책을 꺼내 들었지만, 공급 부족 해소 시점을 점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스푸트니크V〉

얀센·모더나 '안갯속' 러시아 백신 도입까지 저울질

2분기까지 화이자·AZ로 버텨야 러 백신, 국내서 1.5억회분 생산 59개국 사용...美·유럽, 미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4차 유행의 문턱에 다다른 가운데 정부가 결국 새로운 백신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약 선진국이 아닌 러시아나 중국이 개발한 백신이 국내 도입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1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백신만 도입, 접종되고 있다. 정부는 2분기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공급을 공언했으나 노바백스 백신만 3분기 2000만 회분 생산·공급이 확정됐다. 애초 계획했던 2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이 백신은 아직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허가받지 못했다. 주요국에서 2분기 중 허가가 전망되며, 국내 품목허가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얀센과 모더나 백신의 도입 시기와 규모는 여전히 미정이다. 얀센 백신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했



지만 접종할 물량이 없는 상태다. 정부의 모더나 백신 계약 물량은 2000만 명분으로 전체 물량의 25.3%를 차지하지만 역시 기약이 없다. 지금까지 2분기 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개별 제약사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900만 명분이다.

이 같은 백신 수급 불안정 속에서 관계 기관들은 추가 백신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를 비롯한 다른 백신의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기존 입장을 선화한 결정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에 도입하는 백신 외에 면역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다른 종류의 백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백신 수급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추가 도입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다. 스푸트니크V는 러시아가 개발해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으로 국내에서 대규모 위탁생산(CMO)이 이뤄지고 있다.

스푸트니크V는 1만986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91.6%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이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랜싯'에 실려 효능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불식했다.

러시아는 국내 바이오기업 지엘라파와 1억5000만 회분의 백신 생산 계약을 맺었으며, 지엘라파의 자회사 한국코르스가 생산 중이다. 지난해 첫 번째 물량이 수출됐으며, 현지에서 마지막 최종 인허가 단계를 거치면 본격적인 상업생산 물량 수출이 시작된다.

지엘라파는 바이넥스, 보령바이오파마, 이수팜지스, 종근당바이오, 큐라티스, 휴메딕스, 안동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러시아가 추가 수주한 5억 도즈 물량을 소화할 예정이다. 만일 우리 정부와 러시아가 협의한다면 국내 생산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엘라파 관계자는 "현재 수주 물량 생산과 컨소시엄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스푸트니크V의 국내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푸트니크V는 헝가리와 멕시코 등 전 세계 59개 국가에서 허가 혹은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 다만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은 받지 못했다는 점이 변수다. EMA는 최근 스푸트니크V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감염에 의해 참여했다는 의혹을 접수, 윤리적 절차에 지켜 개발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중국은 시노팜과 시노백, 칸시노바이오 로직스 3곳의 코로나19 백신을 각각 승인했다. 시노팜 백신은 국제학술지에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다.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백' 역시 약 740명 규모의 임상 1/2상 결과만 발표하고 공식적인 3상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1회 접종용으로 개발된 칸시노 백신은 랜싯에 2상 결과를 발표했다. 즉, 모두 임상 2상만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판단하고 접종을 개시한 것이다.

특히 시노백 백신의 경우 터키 임상에서는 예방 효과가 90%를 넘었지만, 브라질에서는 50%만 넘기는 등 고무줄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백신은 인도네시아와 터키, 브라질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효능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백신만 도입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중국 백신이 들어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유혜은 기자 euna@

중대본 "자가검사키트 약국 풀 것" 임상·심사 통과에 수개월 걸릴 듯

업계 "당국 도입 결정 너무 늦어" 의료진 "진단 정확성 검증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국내 사용승인을 촉구하면서 자가검사 키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가시화함에 따라 빠른 진단으로 조기에 확진자를 가려내는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정식 허가를 받은 자가검사 키트가 아직 없고,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상시험 후 자료제출, 허가심사까지 거치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의 편의성을 높여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보조적 수단인 장치"라며 "자가검사 키트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요양시설, 기숙사 등 전파 위험이 크다고 알려진 곳에서 양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내는 애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 중대본 백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 허가 이후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에 정식허가를 신청한 자가검사 키트는 전혀 없다. 5개 이상의 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 등 범부처는 임상시험 진행 시 가장 어려운 검체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식약처는 임상시험 후 허가심사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의 사례와 비교해 국내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임상시험을 위해 갖춰야 할 검체 수는 훨씬 많다. 정식허가를 받기까지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라, 임상시험 후 정식허가를 위한 자료 제출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 없이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상시험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검사 키트는 기존에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중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해도 일정 수준의 특이도와 민감도가 도출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인두까지 깊숙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할 경우 비강검사를 통해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가검사 키트의 사용이 활발한 편이다. 미국은 약국·식품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고, 영국은 주 2회 무료로 자가검사 키트를 배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일주일에 3개씩 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체코는 사용자가 직접 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자가검사 키트를 보급했다.

국내 진단키트 업체인 피씨엘, 휴마시스, 수젠텍 등은 유럽에 자가검사 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피씨엘은 오스트리아, 파키스탄에 이어 독일에서 자가검사 키트 승인을 획득했고, 휴마시스는 체코에서 자가사용 인증을 획득했다. 수젠텍은 오스트리아·스위스에 자가검사 키트를 수출하고, 유럽에서는 정식허가를 진행 중이다.

자가검사 키트의 도입을 두고 업계와 의료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자가검사 키트는 분자진단의 성능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검체 채취도 간편하다는 특성 때문에 쓰는 것이다. 자가검사 키트는 의료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됐고 검증을 받았다. 이를 채택할지는 각 나라 환경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는 "업체들은 자가검사 키트로 90% 넘게 환자군을 가려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양성을 진단하는 비율이 15~40%밖에 안 된다"며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고, 일상에서 사용할 때 모의 훈련이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미선 기자 only@

KB금융그룹 | 국민사랑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
아픈 날도, 아프지 않은 날도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를 든든하게 케어해주는
건강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주)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손해보험협회 식의필 제38165호 (2021.01.18)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예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저금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빠 정년 늘고 임금 오르니...아들·딸은 알바·단기 일자리로

청년 정규직 취업 점점 줄어든다

한경연 '청년층 취업' 보고서

최근 7년 동안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년 연장과 임금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정규직 중 청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8.4%에서 지난해 16.4%로 2%포인트(p)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에서는 0.5%p, 임금근로자의 경우 1.5%p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큰 감소 폭이다. 같은 기간 전체 19개 업종 중 12개에서 전체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줄었다.

청년 정규직 비중 7년새 2%p 감소
정년 1년 늘때 청년 취업 0.42%p ↓
시급 1000원 오르면 1.17%p 줄어
"최저임금제 등 고용규제 완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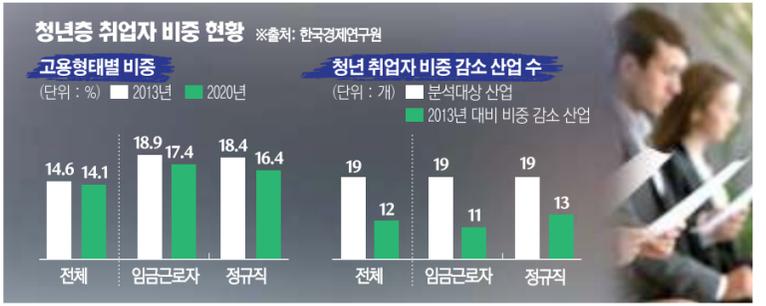
취업자 전체 기준으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2%→17.8%)이다. 반대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정규직보다 임금근로자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연 관계자는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된 취약한 고용 상황을 대변해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8%),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 및 소매업(15.3%) 등 7개였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년 취업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였다. 이보다 비중이 높은 산업은 7개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28.0%였고, 그



뒤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였다.

한경연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연령 상한과 청년취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이 늘 때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약 0.29%p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다. 산업에서의 근로 나이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낮추고, 시간

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 감소했다.

한경연은 앞으로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을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약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특수·보건교사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 교육감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흥제초등학교 보건교사 심연주 씨의 접종을 지켜보고 있다.

감염경로 불명 30% 육박 '4차 유행' 현실화

전국 곳곳 집단감염 확산세 지속
권덕철 "이번주 4차 유행 중대기로"
정부 '자가검사키트' 도입 검토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42명 증가한 11만6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528명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8109명이다. 이 중 2322명

(28.6%)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다.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직전 주간(3월 24일~4월 6일) 26.4%에서 1주 새 2.2%포인트(P) 확대됐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3주 연속 상승했다"며 "이를 근거로 4차 유행은 그 규모가 지난 3차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경고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주가 4차 유행으로 들어가는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만 해도 전국 곳곳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 같은 확산세가 내주에

도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12일부터 시행 중인 강화한 방역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해도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숨은 감염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논의 중이다. 다만, 검사 정확도가 떨어져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증상이나 고위험시설 방문력이 있다면 추가로 유전자분석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양성으로 확인돼도 실제로는 음성일 수 있으므로, 입원이 아닌 추가 진단검사가 필요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아이오닉5 등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 확보

정부가 최근 불거진 전기차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해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은 모두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가 올해 출시하는 아이오닉5 전기차는 현재 4만여 대, 기아가 출시하는 EV6는 2만여 대가 사전 예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출시에 따른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우

려가 커졌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12만1000대로 이 중 전기승용차는 7만5000대인데 국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며 "올해 출고될 신차종에 대한 보조금도 확보했고, 지방비 추가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

라 매월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서울 등 지자체는 지방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순차 확보해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를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국 전기 승용차 보조금 공고대수 대비 신청은 21% 수준이다. 총 공고대수는 4만5814대이고 접수대수는 9646대, 출고대수는 5571대로 실제 보조금 지급은 12%가 이뤄졌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1973@

부모 모두 있어야 아이가 잘 자란다? 편견 깬 KDI "아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주의집중 높아
자녀 학습시간 관리 역량은 하락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 변화할 때 자녀의 학습시간 관리 역량은 하락하지만, 주의집중은 향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KDI 정책포럼 제282호'에 이 같은 내용의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유형 변화와 아동의 발달(김인경 연구위원)' 보고서를 게재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강, 학습습관, 정서 문제, 자존감, 삶의 만족도, 또래에 착, 학교적응,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 등 9개 척도를 활용해 가족 유형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혼자녀를 둔 가구와 조손가구 중 미혼·사별·이혼가구와 조손가구 비중은 19.9%로 2010년(15.9%) 대비 4.0%포인트(P) 확대됐다. 이런 추세에도 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가 동네,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2018년 모두 17.0%로 여전히 높다. 아동의 성장환

경에 양부모가족이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탓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여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성장점수로 매칭해 한부모가족에 속한 아동(실험집단)과 한부모가족으로 변화한 확률이 유사하나 조사 기간 내내 양부모가족에 속한 아동(통제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족 유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학습시간 관리와 주의집중 두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습시간 관리는 평균보다 8.5% 하락했지만, 주의집중은 오히려 14.4% 향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주의집중과 다른 발달 척도에 대한 결과는 아동이 한부모 가족이 되면서 부모 갈등에서 벗어나 애정을 지닌 보호자와 함께 살며 더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경험한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분석 결과는 통상의 우려와 달리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 변화가 아동 발달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으며,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7년 만에...車산업 1분기 '트리플' 증가

지난달 반도체 부족 여파 성장세 꺾여

올해 1분기(1~3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내수·생산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삼중) 증가'를 달성했다. 다만 지난달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 등으로 자동차 산업 성장세는 2개월 만에 꺾였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55만5430대), 내수(43만2349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3%, 16.9% 증가했다. 수출금액의 경우 119억2000만 달러(31.5% 증가)를 기록해 1분기 기준 역대 3위 실적을 달성했다. 내수 판매도 역대 1분기 중 최고 대수를 기록했다. 생산 대수(90만8823대)는 내수·수출 동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2.2% 늘었다.

1분기에 자동차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친환경차 수출 판매는 9만2000대로 역대 분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6만8546대) 또한 역대 2위 실적을 냈다.

다만 지난달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가 2개월 만에 뒷걸음질쳤다. 전년보다 자동차 생산은 9.5%, 내수는 0.9%, 수출은 1.4% 각각 줄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 생산과 내수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대기수요 물량 해소로 판매가 확대됐던 작년 3월의 역기지효과로 인해 소폭 줄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금액은 SUV, 전기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15.3% 증가한 4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 나갑니다

변화된 일상 속 우리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며, 끊임 없이 발전하는 첨단 기술.
 첨단 반도체는 언택트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국민의힘 등 찬성측〉

“실효성 제고를”

복수의결권 도입 진통

〈정의당·경실련 등 반대측〉

“재벌세습 악용”

찬반 갈린 '복수의결권 도입'

복수의결권이란?

'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국가

- 완전 도입 : 미국, 중국, 영국, 인도
- 부분 도입 : 독일, 이스라엘

찬성 업계 벤처 창업주가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 받고 국내 IPO 도전하려면 필요

거대여야 (시민사회 겨냥) 재벌 세습 우려는 법으로 통제 가능

시민사회 규제는 틈 주면 차별론 퍼 중국에는 철폐돼 결국 재벌세습 세 화로 될 것

소수정당 (시민사회 옹호) 거대여야가 여론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입법하는 경우 많아

국회 산자중기위 공청회 찬반 갈려
 창업주 지분 1株당 의결권 10개 부여
 민주당 “기업 자율에 맡겨야 활성화”
 시민단체 “대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차를 가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와 소수야당이 반대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복수의결권 도입안은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주 지분에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10년간, 기업공개(IPO)를 했을 때 상장 후 3년까지만 유효한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유

럽 등 벤처기업들이 활발한 선진국들이 다수 차등의결권을 시행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우리 벤처기업이 마음 놓고 적극적 투자를 받고, 쿠팡처럼 해외에서가 아닌 국내에서 IPO(기업공개)를 하도록 하려면 창업주 경영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냈다. 그러면서 오히려 창업 후 10년과 IPO 후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반대 측은 유럽의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납세 내역이 완전 공개되는 등 투명한 기업 환경이 조성돼 가능한 것이고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이스라엘 등은 도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규제의 틈을 주면 이해관계에 따라 대폭 완화까지 가는 입법 역사를 내세우며 중국에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권 세습의 활로가 될 거라는 우려를 내놨다. 특히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 등 벤처로 시작해 IPO 후 우량기업이 된 국내 사례들을 언급하며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이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찬반 구도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야당은 찬성 측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은 반대 측에 섰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업계에선 정부안이 너무 타이트해 실효성 측면에서 재고해 달라 한다”고 했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재벌들의 악용은 법상으로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맞선 반대 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

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돼 입법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안에는 여러 제한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도입 후엔) 바뀌 달라 할 거고, 재벌기업들은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걸 국회가 막을까. 민주당이 하겠나. 안 할 거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정 정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 측을 옹호했다. 류 의원은 거대야당 협력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경험을 언급하며 박 교수 주장을 거들었다. 조 의원은 “여론에 떠밀려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복수의결권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도로 친문에 與 쇠신 ‘공염불’ 되나

3선 중진들, 당내 갈등분합 소극적
 내달 전대 기준 경선률 유지 가능성
 원내대표도 ‘친문’ 윤호중 의원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로 일어난 쇠신론이 주류 친문(문재인)의 힘에 못 이겨 공염불로 돌아갈 전망이다.

민주당 초·재선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그간 당내에서 언급이 금기시되던 이슈들도 거론하며 자성했다.

하지만 13일 모인 3선 중진들은 조국 사태 등 민감한 사안은 언급을 피하고 강성 지지층의 초선을 향한 비난도 “모두 당을 위한 충정”이라며 당내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친문 재기’ 여부를 가르는 다음달 2일 전 당대회 지도부 경선 룰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의 중추인 중진 의원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초·재선이 쏠아 올린 ‘주류 교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비주류 인사가 지도부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친문 지도부’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당대회의 경우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직전 경선 룰인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투표 10%, 일반당원 5% 비율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오히려 친문 측은 강성 지지층이 두터운 권리당원 비율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방어하기 급급한 비주류 측으로선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한 전준위원은 통화에서 “경선이 코앞인 지금으로서는 당내 혼란을 피하려면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 후에 비율 조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선거 또한 친문인 윤호중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김경협 안구백 의원의 지지를 받아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쇠신론을 둘러싼 양측을 구분하는 ‘바로미터’적인 조국 사태에 대한 의견도 윤 의원과 그에 맞서는 비주류 박원준 의원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이날 후보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 사건은 이미 1년 반 전 진행된 사건으로,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반면 박 의원은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당내 문화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종합하자면 당도, 원내도 ‘친문 지도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초·재선이 제시한 쇠신론이 좌초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신속키트 허가를…공시가 결정 권한 달라”

文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 참가
 文 “서울시·정부 부처 입장 함께 노력
 ‘똑다운 세대’ 전략 청년 대책 강구”

국무회의에 첫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이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가격 결정 참여를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은 요청사항들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우선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정부도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어 “PCR 검사보다 떨어지

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양성 나오면 바로 PCR 검사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무언가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고 긴밀한 논의, 협의 후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상승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직업 훈련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청년 세대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해 이른바 ‘똑 다운 세대’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국힘·국당 ‘야권 통합’ 갈등 격화

국민의힘 “무리한 요구면 거부”...국민의당 “서두를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서로 다른 속사정으로 합당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합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합당할 것처럼 해놓고 변화가 없다며 먼저 굽히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은 13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다든지 하면 (합당 거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들어 보고 나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당대회 해야 하고 원내대표 선출도 해야 한다”며 “빨리 정해 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합당 의견을 요구하는 건 일종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선 굳이 먼저 나서서 합당을 제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차기 지도부에 출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당 과정에서 굽히는 자세를 보여 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비대위원은 “합당에 반대한다”며 “우리 결정을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당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당 역시 야권 통합엔 동의하지만, 합당 과정에서 먼저 굽힐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중도 실용에 따른 야권 통합이 원칙인 건 당연히 큰 범주에서는 맞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쇠신하기 전에 희석되는 건 싫어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쇠신하고 통합하고 이제 정말 거대 열(列)을 향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각성 상태의 합당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상 기자 jooon@

송영길 “무주택자 LTV·DTI 90%로 풀어야”

與 부동산정책 전환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선거 직후 의원들이 앞다투어

동산 정책 전환을 외쳐 왔지만,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건 이날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DTI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이는)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대책은 세입자들이 보기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 먹는 공범자”라며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송영길의 해결책은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자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이라고 구상을 제시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빅테크 잡는 中정부 IPO 접는 스타트업

전세계 신규시장 25년 만에 최고
중정부 통제에 기술혁신 좌초위기
엔트, 당국 압박에 금융지주사 전환

MSCI세계지수·상하이 컷방반지수
등락 추이 ※ 2020년 4월=100 기준



중국 기술 혁신이 당국의 통제 강화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컷방반'에서 무려 88개 하이테크 스타트업이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

13일 니혼게이지(닛케이)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지난주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3조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하이테크 기업을 옥죄는 방향을 돌아선 영향이라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보다 당국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 된 것이다.

상장을 철회한 기업에는 얼굴인식 기술 업체 이투와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성능 센서를 개발하는 허사이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됐다. 두 회사 모두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로 책정됐지만, "규제에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핑 중국 국가주식의 지시로 2019년 개설된 컷방반은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한 기술 업종 260개사를 취급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기술 패권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마윈 알리바바그룹홀딩 창업자가 세운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기업 성장을 장려하던 정부 움직임도 뒤바뀌었다.

지난해 11월 앤트그룹의 상장을 들연 연기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올해 1월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새로운 규제 지침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을 압박했다. 해당 지침은 당국이 불시 조사를 통해 문제 기업을 색출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업들의 상장 자진 철회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달 증감회는 "문제가 있는데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규제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중 대립이 계속되는 것도 중국 IT 기업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이에 컷방반에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장을 취소한 기업은 64개였지만, 올해 1분기에만 88개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1분기 전 세계 신규 상장 건수가 2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인 민은행은 전날 알리바바 산하 엔트그룹 임원진을 세 번째로 소환하고 비로소 시장 계획을 승인했다.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엔트그룹 임원진은 은행, 증권, 외환 등을 포함한 4개의 규제 당국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지난 몇 달에 걸친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장 계획이 수립됐다. 엔트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룹은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와 신용 대출 서비스 제베이·화베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고, 머니마켓펀드(MMF)인 위에바오 규모도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트 측도 성명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당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중국 대표 성장 기업으로 꼽혔던 앤트가 당국에 두 손을 든 모습은 다른 기업의 상장 철회를 가속할 우려도 있다. 닛케이는 "정부의 억압적인 자세는 중장기적으로 회사 주가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상장을 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00@

美 상반기 재정적자 1900조 '사상 최대'

3월에만 724조 적자 "지출 대가 치를 것, 부채 축소 계획 필요"

미국의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1900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21 회계연도 상반기(지난해 10월~올해 3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7062억 달러(1919조475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7435억 달러) 대비 2.3배 급증한 것이며 종전 회계연도 상반기 최고기록(8290억 달러·2010년)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에 따른 지출 확대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 펼친 코로나19 대책에 이어 올해 1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막대한 규모의 부양책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적자 규모가 한층 확대됐다.

특히 1조9000억 달러의 슈퍼 부양책이 통과됐던 지난달 적자 규모는 659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배나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기준 사상 최대이며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 규모다.

바이든 표 슈퍼 부양책에 포함됐던 1



인당 최대 1400달러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막대한 지출이 지난달에 반영된 까닭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지급된 지원금 규모만 3390억 달러에 달한다. 세입은 2676억 달러로 13% 늘었지만, 세출이 9272억 달러로 2.6배 확대됐다.

WSJ는 "정부 지출 급증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줬지만, 연방 부채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치솟게 했다"며 "세수 약화도 적자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재정적자 감축을 지지하는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마야 맥키니스 대표는 "우리는 지금 쌓여가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관해 위험하게 무감각해

지고 있다"며 "우리가 지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부채를 줄일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잇단 경기 부양책에 따라 작년 9월까지였던 2020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인 3조10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2월 의회예산처가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2조30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달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슈퍼 부양안이나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연간 재정적자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위험이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도 경찰 총에 흑인 사망 'BLM 시위' 격화 흑인이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미국 미네소타주 브루클린센터시 경찰서 앞에서 12일(현지시간)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M)' 시위대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해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해 BLM 시위를 촉발했는데 전날 같은 주에서 다시 흑인이 경찰이 쏜 총에 숨지면서 이틀째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브루클린센터/AP연합뉴스

PC 판매율 21년 만에 최고

재택근무 늘며 수요 급증, 전세계 1분기 출하 32%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PC 판매 호조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CN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PC 출하량은 699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증가율은 가트너가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초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초기여서 PC 출하량이 급격히 감소해 기저효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출하 대수 기준으로 2015년 1분기의 7170만 대에 이어 6년 만에 가장 많아 PC 시장이 완전히 살아났음을 보여준다고 CNBC는 풀이했다.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 크롬북까지 포함하면 출하량 기준으로 PC 시장은 1분기에 47%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가트너는 1년 전 공급망이 완전히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아니었으면 1분기 출하량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와 IDC는 1분기 PC 시장이 55%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해도 감소하던 PC 판매는 사태 장기화에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탔다. 가트너는 "1분기 결과는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가 점차 이뤄지더라도 PC 수요가 당분간 왕성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타가 와 마카고 가트너 연구원은 "최소 올해, 특히 상반기에 PC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이런 수요가 얼마나 강세를 떨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레노버가 25.1% 점유율로 세계 1위였으며 휴렛팩커드(HP)와 델, 애플, 에이서, 아수스가 나란히 2~6위를 차지했다. 이들 6대 PC 업체 모두 출하량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 환율조작국 리스트, 中 지우고 훑 날라

바이든 정부 첫 환율보고서... '지정요건 3개 해당' 대만 포함될 듯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중국과 대만에 걸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은 오히려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될 방침이지만, 관계를 개선 중인 대만은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런 결정이 이뤄지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약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확실시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5일 예정된 취임 후 첫 반기 환율 보고서(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1년 동안 200억 달러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

당한 경상수지 흑자 △1년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손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환율조작국 및 관찰대상국을 평가한다.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에 걸리고, 2가지 조건을 갖추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즉시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미국 정부는 환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대상국과 교섭을 진행하는데, 인정 이후 1년 이내에 해제되지 않으면 관세 부과나 정부 계약에서의 배제 등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중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불과 5개월 뒤 중국과의

교섭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환율 보고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중국과 달리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대만은 이번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달러가 하락하는 등 시장은 벌써 반응하고 있다. 미국 달러 대비 대만 달러 가치는 최근 고점인 3월 초부터 지금까지 2% 이상 하락했다.

양진룡 대만 중앙은행 총재도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대만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무역흑자를 줄이려면 미국이 반도체 칩을 사들이지 말아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文정부 '금융 확대' 동북아 금융허브 날렸다

포퓰리즘식 '정치 금융' 부작용
서울 국제금융경쟁력 6위→16위
경쟁자 홍콩·싱가포르 톱5 진입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단위: 순위)



최근 4·6 보궐선거에서 수세에 몰린 여당이 내놓은 카드는 '부동산 금융' 대책이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연일 대출규제 완화 발언을 쏟아냈다. 막판 반전의 수단으로 금융산업을 이용한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식 금융정책 개입이 '정치금융'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이 금융산업을 민심을 얻기 위한 도구, 정부 화풀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는 화풀이 대상으로 금융을 지목했다. 은행이 돈을 쉽게 빌려줘서 사람들이 집을 샀고, 이것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가계대출을 조이라는 업소에 금융당국은 은행장들을 호호해 대출총량제를 주문했다.

매달 은행마다 가계대출 한도를 정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자율적 규제였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웠다. 감독 당국에 등을 질 경우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모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은행이 돈을 죄자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같은 사회적 약자가 희생양이 됐다. 이 같은 포퓰리즘적 조치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키코(KIKO)의 배상을 촉구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데도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금융산업이 정치화 되고 있는 사이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16위에 그쳤다. 2015년 세계 6위를 기록했지만, 6년 새 10계단이나 하락했다. 당

시 아시아 3대 금융허브를 공동 발표했던 홍콩과 싱가포르를 각각 4위와 5위에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GFCI는 영국계 컨설팅 그룹 지엔(Z/Yen)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으로 주관해 매년 3·9월에 산출하며, 비즈니스 환경·금융산업 발전·인프라·인적자원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지수다.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목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2월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면서다. 처음 추진된 2003년부터 계산하면 17년, 1차 계획이 나온 2008년부터 따지면 12년이 지났다. 정부가 거둔 성과는 초라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

표인 외국계 금융사 국내 진입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166개에서 지난해 말 162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수행 과제 중 금융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단 두 개뿐이다. 그마저도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했고,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금소법은 벼락치기 시행으로 혼란을 야기했다. 급기야 노조까지 등을 돌렸다. 최근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불발됐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임명을 요구한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4.6보궐 선거전 정부와 여당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있었는데 선거 이후에 등을 돌렸다"면서 "금융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금융을 정치판에 이용하는 후진적 구조가 우리 금융산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외국계 엑소더스? 씨티銀 "처분 검토"

韓 소매금융 실적 매년 반토막

최근 세계최대 글로벌 은행으로 꼽히는 씨티은행이 국내 시장 철수설 휘말렸다. 매년 거듭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잇을만 하면 철수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블룸버그는 "씨티그룹이 한국·태국·필리핀·호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리테일(소매금융·retail) 사업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이 포함된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 리테일 부문 수익은 약 1조716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씨티그룹은 "지난 1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밝힌 대로 사업별 연계성과 상호적합성에 대해 냉정하고 철저하게 전략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프레이저 CEO는 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에서 리테일과 신용카드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 전문가다. 당장 한국 시장의 리테일 부분을 접지는 않겠지만, 철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측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5년 이후 씨티은행 한국 철수설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15년 씨티그룹은 한국 리테일 사업부문 몸집을 줄이기로 하면서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캐피탈을 매각했다. 2년 뒤인 2017년에는 당시 133개였던 점포를 44개로 대폭 줄이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은 1878억 원으로 2018년 3074억 원에 비해 38.9% 줄었다. 부분별로는 최근 철수설이나도는 개인·소매 금융 부문의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개인·소매 금융의 순이익은 2018년 720억 원에서 2019년 365억 원, 2020년 148억 원으로 해마다 반토막 났다.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0년대 후반에 바클레이스, HSBC 등 글로벌 금융사가 한국시장에서 대거 철수했다. 당시 우리 금융당국의 고질적 금융규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실적을 합한 '국내외 금융사 진출입 실적'에 따르면 2015년 48개, 2017년 37개, 지난해 24개로 갈수록 줄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정치 리스크' 커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제한
→ 은행마다 대출 한도 권고받아 위반 시 불이익



한 시중은행의 대출상담 모습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 코로나 장기화로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2월 간담회

20% 배당제한
→ 순이익의 20% 이내로 연말 배당 제한 권고받아



신한금융의 제20기 정기주총

이익공유제
→ 서민금융 재원에 해마다 1000억 원 이상 출연해야



지난달 국회 정부위원회 회의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반시장화'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이익공유제.'

정부가 금융권에 직접 요구한 내용이 다. 여기에 20% 배당제한까지, 수익을 냈지만 나누지 말라는 반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부의 방침은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모진 회초리뿐이다. 금융권에 불어닥친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이어졌다. '무조건 은행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 대출·이자 유예 '부실뇌관'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이자유예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가 하반기가 당장 적적이다. 코로나19 대출에만 이미 수조 원을 투입했고, 원금과 이자유예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지난해 4월, 6개월 한시적 조치로 도입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6개월 연장돼 오는 3월 말까지였다. 코로나19 확산세 꺾이지 않으면서 이번엔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 대출 추가 이자유예가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대비해 차주 상황에 맞게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은행권은 탐탁치 않다. 상환 기간이 너무 광범위하고, 상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이번 조치가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출 만기 재연장보다 이자 재유예에 더 민감하다.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며 "당장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데 이자 유예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추후 부실금융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모펀드 사태로 연이은 CEO 중징계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부실 판매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금융지주 지

작년 최대 실적에도 '한숨'
정부가 주주환원 등 경영 개입
부실기업 선별 않고 지원 연장
서민 복지 재원 마련까지 강요

배구조가 휘청이고 있다. 금융권은 잇따른 CEO중징계가 금융권에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리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이 받은 징계는 모두 연임이 금지되고 향후 3~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엄한 징벌이다. 3차에 걸친 제재심에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해 손 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융위에서 문책경고안이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물론 금융권 재취업도 금지된다.

손 회장은 이미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회장 직무는 유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그룹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 관측이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진옥동 행장 역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임기 종료 뒤 금융권 재취업이 막히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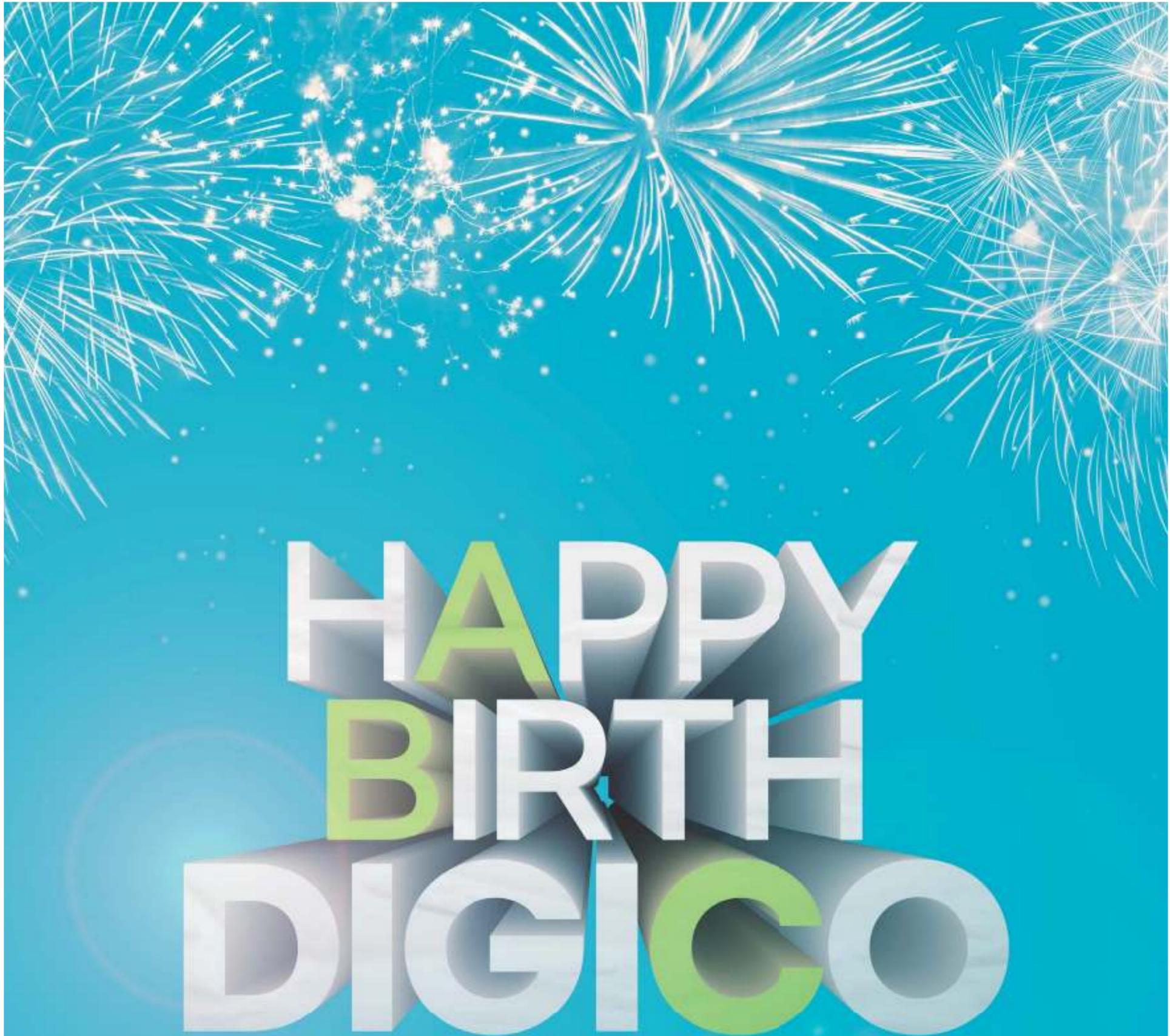
CEO 중징계 지배구조 흔들
"펀드사태 문책 법적근거 희박"
회장 후보 선임 제동 가능성에
징계 확정 시 소송 등 적극 대응

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 회장과 진 행장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금감원은 이 규정을 들어 CEO들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징계가 법적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선언적 문구인 만큼 제재 근거로는 불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징계를 받은 만큼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아니지만 정치에 지배 =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20% 배당제한 권고까지 내리면서 주주들마저 등을 돌릴 판이다. 은

행권 분기 배당 약속하는 등 주주달래기 나서고 있지만, 이득에 대한 주주환원이라는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6월 말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은행과 은행지주에 권고하자, 과도한 경영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해당기순이익은 10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은행 대출 이자 이익이 늘고 증시 호황으로 비은행 부문 수수료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오히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에 연말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들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배당축소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주주들은 불만이다. 저금리로 은행 주가가 하락세인데다 배당까지 축소하면 투자 매력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참여와도 맞물려 '정부가 은행의 배당 축소분을 이익공유제에 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의 부담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은행권은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햇살론 등 서민금융 재원에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정부와 국회가 '대출로 돈을 버니 이익을 공유하라'는 취지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 은행권에서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서민금융 복지 재원을 사기업인 은행에 떠맡기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HAPPY
BIRTH
DIGICO

오직 사람을 생각해온 AI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도움이 되어온 Bigdata
 늘 그래왔듯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Cloud를 기반으로
 DIGICO KT가 당신의 미래로, 당신의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DIGICO **KT**

DIGICO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 리딩을 함께하겠습니다

차체 키우고 공간 활용 극대화 현대차 'PBV 청사진' 나왔다

〈목적기반 모빌리티〉

MPV '스타리아' 첫 공개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 뎀
운전석·동승석 개념 사라져
사무공간·침대로 실내 활용

내일부터 2개 모델 판매 돌입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목적기반 모빌리티', 이른바 PBV의 밑그림이 나왔다.

현대차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로 날아가 △허브(HUB)에 내린 뒤 △목적기반 모빌리티(PBV)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게 핵심이다.

13일 현대차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개념 다목적차(MPV) '스타리아(Staria)'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올해 내수 판매 목표는 3만8000대, 내년부터 5만5000대의 스타리아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에는 수소 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스타리아도 출시한다.

스타리아는 현대차가 트라제에 이어 22년 만에 선보이는 MPV(Multi Purpose Vehicle)다. 차 이름 스타리아는 별(STAR)과 물결(RIA)의 합성어다. 디자인 역시 별과 별 사이를 유평하는 우주선에서 영감을 얻었다.

스타리아 디자인에서는 개방감을 키우기 위해 차 옆면 '벨트라인'을 낮춘 게 눈길을 끈다. 벨트라인은 유리창과 차체의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이 낮을수록 탑승객은 개방감을 더 느낄 수 있다. 현대차는 "전통 한옥의 넓은 개방감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새 모델은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가운데 한 축인 목적기반 모빌리티 PBV



1 현대차가 스타렉스 후속 모델 스타리아를 공개했다. 새 모델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구축을 위한 '목적기반 모빌리티(PBV)'의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사진은 스타리아 외관. 2 자율주행 시대 도심 운행 예상도.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Purpose Built Vehicle)의 밑그림이다.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운전석과 동승석의 개념이 사라진다. 이때가 되면 운전대(스티어링 휠) 자체가 달리지 않는다. 결국, 승객은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게 된다. 차 실내가 사무공간이나 침터, 영화관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타리아의 차 길이는 5255mm다.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 무려 30cm가 더 길다. 높이와 너비도 각각 1990mm와 1995mm에 달한다. 공간을 키우고 개방감을 확대한 것도 향후 PBV 개발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스타리아

는 승용 고급 모델 '스타리아 라운지'와 일반 모델 '스타리아' 등으로 제품군을 짰다. 일반 모델은 승합 개념의 투어러(9·11인승)와 카고(3·5인승) 등으로 다시 나뉜다.

일반 모델인 스타리아 투어러(9·11인승)에는 2월부터 전 좌석이 완전히 접히는 풀 플랫(full flat) 시트를 갖췄다. 성인이 누워 잠을 자거나 아이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차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 캠핑' 등 야외활동에도 유용하다. 스타리아는 2.2 디젤과 3.0 LPG 등 2가지로 파워트레인을 운영한다. 가격은 디젤 카고 3인승 기준 2726만 원, 고급 모델인 스타리아 라운지는 7인승 4135만 원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수에즈운하 사고 여파 5월말까지 지속될 것”

국제 해운업계, 운항 일정 지연
유럽·아시아 항만 체화 불가피

지난달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그린 호의 좌초로 인해 일주일간 막혔던 수에즈운하가 정상화 됐으나 글로벌 해운업체들은 사고의 여파가 최소 한 달은 더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업체 머스크, 독일 해운업체 하팍로이드 등은 수에즈운하 사고로 인한 항만 체화 등이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머스크 관계자는 “국제 해운업계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복구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5월 하반기에도 파급효과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팍로이드도 “수에즈운하 사고의 여파로 향후 4주간 유럽 항만의 체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사고로 지연된 선박들이 거의 동시에 유럽 또는 아시아 항만에 도착하면서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는 향후 몇 주 동안 컨테이너 트래픽이 평소보다 10%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선박의 예정된 운항 일정이 지연된 탓에 '도미노 효과'도 우려된다. 머스크는 수에즈운하 사고로 약 50척의 선박이 1주일가량 지연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케줄 지연으로 이달 중순 이후 아시아 지역 헤드홀(아시아→유럽)의 임시 결항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 머스크는 수에즈운하 사고 즉시 중단했던 아시아발 단기화물 예약을 재개했으나 현재의 적체와 장비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머스크는 고객 측에 긴급한 물품만 보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상운수가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물류업체들이 철도 운송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세계 무역의 약 90%가 해상으로 운송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증가한 탓에 수에즈운하 사고의 여파에 대처할 수 있는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예비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덴마크 해운컨설팅업체 씨인텔리전스 “선박 공급량에 변동성이 커진 상황으로 향후 2-3개월간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LG화학, 친환경 소재로 中시장 공략

‘차이나플러스 2021’ 참여

LG화학이 재생 플라스틱, 씩는 플라스틱, 바이오 원료 기반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를 앞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1’에 참여한다. 차이나플러스는 매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플라스틱·고무 산업 박람회다. 총 40여 개국, 약 3600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다.

LG화학은 이번 행사에서 △재생 플라스틱(PCR ABS, White PCR PC) △씩는 플라스틱(PLA, PBAT) △바이오 원료 기반의 Bio-SAP △환경호르몬 없는 친환경 가소제 등을 소개하고 고객 유치에 나선다.

LG화학이 마련한 부스는 국내 참여 업체 중 가장 큰 규모(400㎡)다. LG화학은 ‘지속가능한 삶’을 주제로 △홈 존(Home Zone) △산업 존(Industry Zone) △모



차이나플러스 LG화학 부스 전경.

빌리티 존(Mobility Zone)을 운영한다.

홈 존은 재생 플라스틱이 사용된 가전제품과 바이오 원료 소재가 활용된 생활용품을 소개한다. 산업 존에는 친환경 가소제가 사용된 용접용 호스와 NB라텍스 장갑 등이 전시된다. 모빌리티 존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활용한 전기차 소재 등을 보여준다. 한편 LG화학은 1995년 국내 화학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생산법인을 설립했다. 현재 북경에 있는 중국지주 회사를 포함해 생산·판매 법인 15개를 운영 중이다. 김대영 기자 kdy@

아이오닉·코나 EV, 우버 손잡고 유럽 누빈다

현대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현대자동차가 유럽 전동화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우버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유럽의 우버 파트너 운전자에게 아이오닉 전기차와 코나EV 수천 대를 할인한 가격에 제공한다.

앞서 우버는 2030년까지 배출가스 제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버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차량 예약 시 배출가스 제로 차량에 탑승하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마이클 콜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은 “이번 제휴는 우버 운전자들의 전기차 전환을 돕고, 유럽 여행의 친환경성도 더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전기차 장점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우버는 파트너 운전자에게 전기차 관련 혜택을 홍보하고 시승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럽의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가속할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첫 국산 전투기에 ‘두산중 3D프린팅 부품’ 탑재

두산중공업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한국형 전투기)에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부품을 공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부품은 전투기 내 공기 순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자재 중 하나다. 최근 출고식에서 공개된 KF-21 시제 1호기에 장착된 것을 포함해 시제기 2~6호기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3D프린팅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분말을 층층이 쌓으면서 레이저로 용융시켜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제조단가를 절감하고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두산중공업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용 소재 건조 및 3D프린팅 공정 기술 국산화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KF-21 전투기 부품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사는 부품 국산화를 확대를 위해 향후 양산 단계에서도 3D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연합뉴스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전략혁신부문 송용진 부사장은 “그동안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을 제작해 왔으며, 이번에 항공, 방위산업 부품 제작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주혜 기자 winjh@



KCC글라스가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에 안전유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KCC글라스가 현대자동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에 안전유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KCC글라스는 아이오닉 5의 앞유리, 도어유리, 뒷유리를 포함한 차량 안전유리 전량을 공급한다. 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앞유리와 ‘솔라 셀 루프’의 커버 유리에도 최신 기술의 안전유리를 공급해 아이오닉 5의 첨단 기능을 지원한다.

아이오닉5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넓은 실내 공간을 바탕으로 양방향 충전 시스템 ‘V2L(Vehicle to Load)’,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 HUD)’, 태양광 충전 지붕인 ‘솔라 셀 루프(Solar Cell Roof)’, 디지털 사이드미러 등 현대차 최신 기술이 집약돼 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국내 최대 자동

차용 안전유리 제조 기업으로서 아이오닉 5 공급을 통해 다시 한번 KCC글라스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의 첫차인 아이오닉5 안전유리 공급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고기능성 유리 개발과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통해 미래 자동차 안전유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LG화학 부회장〉 신학철의 '안전경영' 최대 채용으로 실천

대산공장 등 잇단 사고에
LG화학, 환경·안전 분야
올해 세 자릿수 채용 계획

LG화학이 올해 환경·안전 분야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채용한다. 환경·안전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다짐이 현실화된 것이다.

13일 LG화학 관계자는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밝힌 것처럼 환경·안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리려고 한다”며 “채용 예정 인원을 모두 합하면 올해 역대 규모로 환경·안전 관련 인력을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최근 주총에서 환경·안전 체제 구축 방안과 관련해 “가능성 ‘0’에 가까운 시나리오까지 대응 가능한 다중의 예방체계를 확보하고 환경·안전 전문인력과 역량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환경·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경력직 채용에서도 예년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채용에서는) 일단 세 자릿수 수준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인원과 공장별 배치 예정 인원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LG화학이 안전을 강조하는 배경은 연달아 발생한 사고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LG화학 대산공장 촉매 포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019년 5월에는 LG화학 하청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LG화학은 사고 이후 ‘안전경영’을 목표로 여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사내 환경·안전 규칙보다 세분화된 수칙을 만들기도 했다. 중대 사고 원인이 되는 10가지를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수칙은 재해별 조치 사항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화재·폭발 등 위험 작업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을 할 때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질식 위험 작업을 할 때 독성가스 및 산소 농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작업장 비상통로 확보 등의 조치 사항도 명시했다.

사내의 전문가들이 고위험 공정과 설비, 각국 60여 개 공장을 대상으로 안전진단도 시행했다. 안전진단으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만 약 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환경·안전 인력을 예년보다 대폭 늘리는 것도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에 채용하는 직무는 △환경·안전 설비 진단 및 개선 △선진 회사 기술 검토·현장 활용 △국제 표준 규격 검토 △공정 환경·안전설계 검토 및 개선 지원 △국내외 환경·안전 법규 검토 및 실행 △위험성 평가 △환경 안전 시스템 개선 등이다.

LG화학은 관련 업계에서 환경·안전 업무 경험이 있거나 장치산업 현장과 설계에 관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찾고 있다. 생산·기술·설계 엔지니어 경험자도 모집 대상이다. 이번 채용에는 4년제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채용 직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8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다.

김대영 기자 kdy@

SKIET, 中 배터리 분리막 2공장 가동

내년 1분기 전면 가동 목표
연간 전기차 50만대분 생산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최근 중국 강소성 장저우 분리막(LiBS) 2공장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2공장의 총 생산능력 3억4000만㎡ 중 절반을 가동한다. 나머지 생산라인은 내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IET는 지난해 11월 장저우 1공장의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1공장의 생산능력이 3억4000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가 가동으로 중국에서만 5억1000만㎡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매년 고용량 전기차 약 50만 대에 필요한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로써 한국, 폴란드,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보한 생산능력은 10억4000만㎡다. 2024년에는 27억3000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SKIET는 2019년부터 중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시장성을 고려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중국 장저우 분리막 2공장 전경.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해외 첫 생산거점으로 삼은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SKIET가 생산하는 분리막은 중국에서도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장저우 2공장을 가동하기 이전부터 이미 올해 생산할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늘면서 그 원인으로 분리막이 언급되고 있지만, SKIET의 분리막은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SKIET는 지난해 ‘티어1(Tier1)’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점유율 26.5%로 세계 1위

를 차지했다.

티어1은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닛산,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완성차 업체들을 말한다. 티어1 분리막 시장은 이들 기업에 공급되는 분리막 시장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노재석 사장은 “성능과 안전성 모두 잡은 프리미엄 분리막을 공급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한편, 독보적인 시장 선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지속해서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삼성 '신세계·풀무원'에 구내식당 맡긴다

수원·기흥사업장 급식업체 선정

그룹 구내식당 운영을 외부에 개방한 삼성전자가 외부 급식업체 경쟁 입찰에서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엔컬처'를 운영 업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을 비롯한 현대자동차·LG·현대중공업·신세계·CJ·LS·현대백화점 등 8개 대기업 집단의 그룹 구내식당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월부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2개 식당을 시범 개방 장소로 정해 외부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공개 입찰을 공고했고, 그 결과 두 개 업체가 선정됐다.

약 20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입찰은 서

류 심사를 거쳐 △메뉴 구성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프레젠테이션 △업체의 인프라와 위생 등을 점검하는 현장 실사 △임직원 음식 품평회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엔컬처'는 약 한 달 반 동안 고충승계, 업무인수 등을 마친 후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신규 업체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와 운영상 보완점 등을 검토 후에 다른 사내식당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1983년 기흥공장 설립 당시엔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다가, 1997년부터 삼성에버랜드(현재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다.

노우리 기자 we1228@



갱년기엔 갱년기유산균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인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확인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내 안의 나를 깨우다”



갱년기,
참지 마세요!

갱년기 여성건강과 장건강 동시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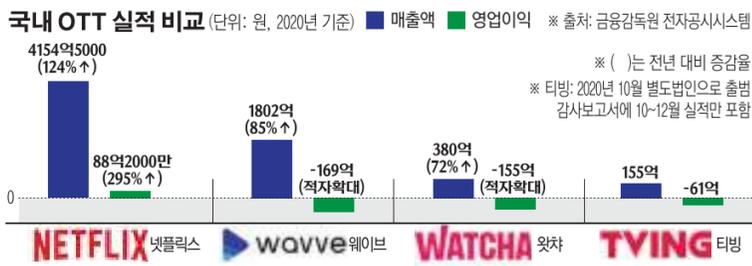
* 2021. 2월 기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매사 (주)휴온스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소비자 상담실 080-447-4700

토종 OTT 적자날 때 넷플릭스 영업익 4배 뛰었다

넷플릭스, 국내 실적 첫 공개
매출액 4155억, 영업익 88억
웨이브·왓차 영업손실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 격화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수익성 면에서는 토종 OTT 업체와 넷플릭스 간 희비가 갈렸다. 토종 OTT 업체들은 적자가 늘어난 반면 넷플릭스는 전년 대비 4배가 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4154억 5000만 원, 영업이익은 88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23.5%, 295% 증가한 규모다. 당기순이익은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5% 늘었다.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은 2016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매출액 중 96%는 가입자들이 내는 월정액 요금에서 발생했다. 스트리밍 수익은 3988억 원, 그룹사 수익은 166억 원으로 스트리밍 수익이 전년 대비 127% 늘어났다.

웨이브, 왓차 등 국내 OTT 업체들도 지난해 매출액을 크게 늘리며 성장했다. 다만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에 따른 적자 기조는 여전했다.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는 지난해 매출액 1802억 원, 영업손실 16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전년 137억 원에서 30억 원가량 확대됐고, 매출액은 전

년 대비 85% 뛰었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212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늘었다. 웨이브 관계자는 “투자를 줄이면 흑자 전환하기는 쉽다”며 “지금은 투자 확대로 계속 콘텐츠를 탄탄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부연했다.

왓차는 지난해 매출액 380억 원, 영업손실 155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늘었고, 영업손실은 109억 원에서 50억 원가량 늘었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165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축소됐다.

왓차는 영업손실이 늘었지만, 손실 폭이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왓차 관계자는 “매출액 성장 유인이 다른 어떤 외부 효과 없이 순수하게 이용자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라 “올해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액 규모를 더 키우면 비용 효율화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CJ ENM으로부터 분할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티빙은 지난해 4분기에 15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61억 원, 45억 원을 냈다.

토종 OTT 업체는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이 격화하는 탓에 당분간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역시 ‘현금을 불태우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크게 투자했고, 재무 건전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 올해만 55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 디즈니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할 예정이어서 이른바 OTT 시장의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티빙은 2023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KT는 미디어사업의 콘트롤 타워로 ‘KT 스튜디오지니’를 설립하면서 국내 업체들보다 큰 규모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구형모 KT 대표는 투자 규모에 관해 “적어도 3000억, 4000억 원 하겠다는 국내 기업보다는 많지 않겠냐”며 “설사 손실이 나도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KT 그룹이) 지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웨이브는 2025년까지 총 1조 원 규모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1조 원’은 2019년 출범 당시 5년간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데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올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해 계속 선보일 것이고 독점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해의 시장에 나갈 때 플랫폼도 같이 키워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스마일게이트 매출 ‘1兆 클럽’

해외 매출 84%, 영업익 3646억

스마일게이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 매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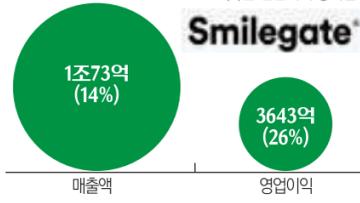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매출액이 1조 73억 원, 영업이익 3646억 원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 26% 성장한 수치다.

스마일게이트의 지난해 매출을 살펴보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록한 해외 게임 매출은 843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크로스피어와 로스타크, 에픽세븐의 글로벌 흥행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스마일게이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수출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7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하기 시작한 스마일게이트는 그동안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바탕으로 국내 비즈니스 역시 지속해서 확장해 왔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활동을 통해 약 240개 이상의 미래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끌어내 우리 사회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창업 지원 활동은 지금까지 20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청년 창업 지원 이외에도 스마일게이트는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나은 미래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

스마일게이트 지난해 실적 (단위: 원) * ()는 전년대비 증가율



는 IP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도전을 이어갔다. 소니 픽처스와 크로스피어 영화의 배급 계약을 맺어 본격적으로 할리우드 영화 시장에 뛰어 들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중국에서 e스포츠 드라마 ‘천월화선’을 방영해 18억 뷰어 삽이라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설립한 ‘스마일게이트리얼라이즈’를 통해 다양한 신규를 IP 발굴하고 확보하여 IP를 활용한 문화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는 “올해에도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피어, 로스타크, 에픽세븐 등의 주력 IP들이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한 유저 친화적 공감 운영을 통해 국내 외 시장에서 사랑 받는 IP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해 나갈 것”이라며 “크로스피어 X를 시작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최신 성능·양자암호 기술 갖춘 ‘갤럭시 퀴텀2’

SKT, 20~22일 사전 개통
인증·금융 등 안전성 강화

SK텔레콤(SKTEL)이 삼성전자와 함께 양자 보안 5G 스마트폰 ‘갤럭시 퀴텀 2’를 이달 23일 출시한다.

13일 SKTEL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부터 22일까지 사전개통을 진행한다.

‘갤럭시 퀴텀 2’는 6.7인치 대화면에 6400만 화소 카메라,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칩셋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급 성능에 강화된 양자암호 보안 기술을 갖췄다.

SKTEL은 “성능과 보안 양쪽 모두를 중시하는 고객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TEL은 ‘갤럭시 퀴텀 2’에 전자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가로 2.5 x 세로 2.5mm)의 양자 난수 생성(QRNG, 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 칩셋을 탑재했다.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은 예측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생성해 인증, 금융, 메신저 등 보안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갤럭시 퀴텀 2’에서는 서비스별로 별도의 양자 보안 적용 개발이 필요했던 전작을 보완했다. ‘안드로이드 표준 키스토어(암호화돼 단말에 저장된 고객 인증 정보를 앱의 인증, 로그인, 결제 시 호출하는 시스템)’를 이용하는



13일 서울 마포구 ICT 멀티플렉스 T팩토리에서 모델이 양자보안 기술이 적용된 5G 스마트폰 ‘갤럭시 퀴텀2’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서비스는 별도 개발 없이 로그인, 인증, 결제 기능 실행 시 양자 보안 기술이 자동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전작이 양자 보안 기술을 탑재해 일부 특화 서비스에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했다면, ‘갤럭시 퀴텀 2’는 단말 자체에 연동된 양자 보안 기술이 각 서비스에 적용되는 셈이다.

SKTEL은 ‘갤럭시 퀴텀 2’ 출시 뒤에도 차례로 삼성카드 등 금융사를 비롯해 플로(FLO), V커리링 등 다양한 서비스들로 양자 보안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갤럭시 퀴텀 2’는 SKTEL의 투자회사

IDQ(ID Quantique)의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을 탑재했다. SKTEL은 2011년부터 양자 보안 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2018년 양자 암호통신 세계 1위 기업 IDQ 인수, 2019년 EU(유럽연합)와 미국의 양자 암호통신 구축 사업을 수주 등 꾸준히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TEL은 ‘갤럭시 퀴텀 2’ 단말 1대 판매 당 1000원씩을 적립해 누적 적립금으로 노트북, 태블릿PC 제품을 마련해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산단공 ‘통합공시 우수기관’ 선정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0년도 통합공시 점검’에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경영공시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공시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는 일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 331개 공공기관 중 산단공을 비롯한 15개 기관이 함께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단공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

리오)을 기관 홈페이지와 연동하고 공시 정보별 담당자를 지정해 자체 교육 및 점검을 하는 등 기관의 운영 및 재무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통계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정환 이사장은 “경영정보 공개는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산단공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국가산업 단지의 진흥을 선도하는 혁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 kjm@



문규영 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동참 (아주그룹)

문규영(사진) 아주그룹 회장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참가자가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문 회장은 다음 주자로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이강호 PMG 회장,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을 추천했다.

문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주의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설레는 쇼핑의 완성, 신한카드 Unboxing



쇼핑 트렌드에 꼭 맞는 혜택으로 더 설레는 Unboxing



설레는 쇼핑
신한카드 Unboxing



배송비/온라인을 월 회비
월 최대 6회 건당 2,500원 할인



온/오프라인은 물론 최신 트렌드 습까지
쇼핑 전 영역 10% 월 최대 5만 원 캐시백



해외(온/오프라인) 20만 원 이상 이용 시
쇼핑 캐시백 한도 2만 원 추가 제공

- 연회비 국내(Local) 3만 2천 원, 해외검용(AMEX) 3만 5천 원 - 계약 체결 전 카드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상품 설명서, 약관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최고금리(연 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상의필 제 2021-C2b-01029호 (2021.02.05~2022.02.04)

Lead by  신한카드

리사이클 소재 '착한 옷' 갈아입는 패션업계

코오롱스포츠, 재생 나일론 원단 선택 스파오, 자연 친화 인증받은 데님 사용 블랙야크, 페트병 옷 '플러스틱 컬렉션' 지속가능성 앞세워 '친환경 경영' 가속

패션기업들이 '친환경 경영'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후 위기, 환경문제가 대두하면서 업계가 '지속가능성'을 앞세운 리사이클 소재 등의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아웃도어 업체 코오롱스포츠는 직접 개발한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인 '코오롱 나일론'을 이번 봄·여름시즌 상품 일부에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코오롱 나일론'은 코오롱스포츠, 코오롱글로벌, 이탈리아 원사 제조 업체인 아쿠아필(AQUAFIL)의 협업으로 약 10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개발에 성공했다. 아

쿠아필의 재생 나일론 '에코닐(ECONYLE)'을 사용해 코오롱스포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단으로 탄생시켰다.

코오롱스포츠는 이번 리사이클 소재 개발로 에코닐의 경우 1톤이 생산될 때마다 7만 배럴의 원유를 절약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약 6만50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시즌 상품에 적용된 코오롱나일론의 생산량은 2.5톤으로 이번 시즌 상품 중 10개에 적용됐다.

이랜드윌드가 운영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 스파오도 이날 터키산 친환경 원단을 사용한 리사이클 데님을 내놓았다.

스파오 리사이클 데님은 터키산 이스코(ISKO)와 키파스(KIPAS) 원단을 사용했다. 이스코와 키파스 원단은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님 소재로 통한다. 컬러감이 우수하고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단이다.

스파오는 2019년 처음으로 리사이클 데님을 출시한 이후 와이드핏, 테이퍼핏, 부츠컷 등 핏을 다양화하고 있다. 올해는 데님 재킷과 데님 원피스 등으로 스타일도

확장했다. 지난 2월 친환경 라인으로 실제 가죽이 아닌 '페이크 레더(인조가죽)'를 사용한 '에코 레더' 라인업도 선보였다.

블랙야크는 페트병으로 만든 의류를 모은 '플러스틱 컬렉션'을 선보였다. <사진> 플러스틱(PLUSTIC)은 플러스(Plus)와 플라스틱(Plastic)을 합친 합성어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지구에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이다. 비와이엔블랙야크가 유관부서들과 협력해 개발한 친환경 소재의 이름이기도 하다.

플러스틱 컬렉션은 K-rPET(케이알피이티) 재생섬유가 적용된 티셔츠, 자켓, 팬츠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종류에 따라 각 제품당 500ml 기준으로 최소 15개부터 최대 30개 이상의 페트병이 재활용됐다. 대표 제품으로 △'BAC치약3티셔츠' △'BAC설악3티셔츠'가 있다.

항공 기능이 더해진 'BAC운약2자켓', 'M가디언트레이닝자켓'은 세균 걱정 없이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 가공이 된 블랙야크 '안심주머니'가 적용됐다. 두 제품 역시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섬유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각각 니트, 스판 소재를 더해 기능성까지 갖췄다. 같은 소

재가 적용된 'BAC운약2팬츠', 'M가디언트레이닝팬츠'와 세트로도 입을 수 있다.

한세엠케이의 베이직 트렌디 캐주얼 브랜드 TBJ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만든 원단을 사용한 의류 '나이스아이템'을 최근 선보였다. 원두가 가진 향균 및 냄새 제거 기능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세균 번식을 차단해 주며, 천연 자외선 차단 역할과 흡습 속건 기능까지 제공해 위생관리 부분에 매우 효과적이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도 '착한 옷 입기' 대열에 동참했다. H&M은 이날 지속가능한 패션 미래를 향한 이니셔티브를 이끌기 위해 배우 메이지 윌리엄스와외=파트너십을 발표, 2030년까지 100% 재활용 또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재만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H&M은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의류 리사이클링 스테이션인 H&M 루프 아일랜드를 선보인다. H&M 루프 아일랜드에서 게임 플레이어들은 섬을 탐험할 수 있으며, 모여봐요 동물의 숲 최초로 게임 의상을 새로운 의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코오롱스포츠

쿠팡, 작년 매출 2배 늘고 손실폭 23.6% 줄었다

쿠팡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쇼핑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배가량 늘었고 손실폭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뉴욕 증시 상장 과정에서 실적을 공개했는데, 국내 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상장 후 처음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매출 13조9235억 원, 영업손실 5504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7조1530억 원)보다 94.6% 늘었고, 영업손실 폭은 23.6% 감소했다.

쿠팡은 꾸준히 외형을 키우고 있다. 쿠팡은 2018년 4조3545억 원, 2019년 7조15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지

난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추세를 누리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로켓 배송을 시작한 2014년 매출(3485억 원)과 비교하면 매출은 40배가량 늘었다. 영업손실 폭도 줄어나가고 있다. 쿠팡은 2018년 1조 127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19년 4000억 원가량 손실 폭을 줄여 7205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5504억원으로 전년보다 손실폭을 1700억 원가량 더 줄였다.

13.9조... 상장 후 첫 실적 공개

이런 가운데 투자 금액은 늘었다. 쿠팡은 지난해 6038억 원의 취득/자본적 지출(투자적 경비)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2811억 원)에 비해 115% 늘어난 수치다.

3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5조 원가량의 실탄을 확보한 쿠팡은 국내 물류 인프라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6일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남권에 물류센터 3곳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쿠팡은 3000여억 원을 들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창원시 진해구 두동지구에 일반 및 신선 물품을 취급하는 통합 스마트 물류센터 2곳을 신설한다. 아울러 김해시 상동면 대갈리에도 190억 원을 투입해 물류센터를 짓는다.

이와함께 쿠팡은 싱가포르 진출도 추진한다. 쿠팡은 지난달부터 싱가포르 법인을 경영할 임원진과 직원 등을 채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뉴욕 증시 상장 때부터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쿠팡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이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 론칭을 준비하면서 싱가포르 OTT 업체 후(hooq)를 인수한 것도 동남아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백화점서 예술작품 감상하세요" 롯데백화점이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공예, 디자인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신당창작아카데미 아트마켓 '에스스토어(S-store)'를 강남점 4층에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S스토어'에서 고객이 예술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쇼핑

CU 말레이시아 1호점, 오픈 후 열흘간 1만명 '긴 줄'

떡볶이 2500컵 판매 매출 1위

CU는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오픈한 1호점 'CU센터포인트점'에 열흘간 1만1000여 명이 넘는 현지 고객이 다녀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000명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한국 편의점의 점당 평균 객수 대비 약 3.3배 높은 수치다. 대형마트 최소 규모(연면적 3000㎡)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소 약 18만 명이 다녀간 셈이다.

CU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단축 운영하고 동시 출입 인원을 30명 내외로 제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상 운영 시 이용 고객은 지금보다 2~3배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말레이시아 CU에선 한국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매출 1위 제품은 한국의 대

표 분식 메뉴인 떡볶이로 열흘 간 무려 2500컵이 팔렸다.

닭강정, 핫도그, 짜장떡볶이, 오뎅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한국식 즉석조리식품들이 전체 매출에서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형근 BGF리테일 해외사업실장은 "CU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고객들이 끊이지 않고 언론의 취재 요청도 빗발치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브랜드로 해외 무대에서 한국을 더 많이 알릴 것"이라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CJ제일제당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신설

'다시 자연으로' 선순환 탄력

CJ제일제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최은석 대표이사외 사외이사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지속가능경영 담당 임원 등이 간사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발굴·파악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을 점

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승인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최은석 대표가 의장인 '지속가능경영 협의체'가 구성되며, 올해 신설된 ESG 전담기구인 Sustainability 팀이 지원 역할을 한다.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자연에서 소비자 식탁으로,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CJ제일제당의 'Nature to Nature' 선순환 체계 실현을 위한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CJ제일제당은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환경' 두 가지 핵심 공유가치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는 △친환경 에너지 도입 및 탄소중립 달성 △포장재 등 자원 재활용 및 생분해 기술 개발 △인공지능 추진 및 인적 다양성을 고려한 조직문화 조성 △고객 건강과 영양 증진을 위한 제품 개발 △지속가능한 공급망 체계 구축 △선제적 법·윤리 리스크 관리 시스템(Compliance 경영체계 등) 구축 등을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경영철학인 '사업보국(事業報國)'에 뿌리를 두고, 소비자,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GS수퍼마켓 印尼 법인, 현지서 32억 투자 유치

GS리테일은 인도네시아 법인이 현지 최대 그룹 구당가람의 투자회사로부터 유상증자 형식으로 한화 32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GS THE FRESH)은 2016년 인도네시아 슈퍼마켓 사업에 진출해 현재 5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GS리테일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현지 시장 및 소비자 니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위한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현지 GS

수퍼마켓은 선진화된 마케팅과 다양한 한국식 상품 제공 등을 바탕으로 진출 4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주주로 참여하는 PT NIS는 인도네시아 최대 그룹인 구당가람의 투자회사다. 구당가람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SI)을 통해 슈퍼마켓 사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수출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현대엔지니어링 IPO, 정의선號 지배구조 개편 빨라질까

연내 코스피 상장 목표... '순환출자 구조' 간소화 기대
상장 시 지분 추가 매각 지배구조 개편 실탄 마련할 듯

현대차그룹이 비상장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분 11.72%를 보유한 2대 주주라 이번 IPO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재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연내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의 2대 주주로 지분 11.72%를 보유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4.68%의 지분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비상장 주식 시세는 주당 100만 원 안팎에 형성돼 있어 현재 시가 총액은 7조5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상장 후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정 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정 회장이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후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서는지 시나리오가 부각되고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21.4%)→현대차(33.9%)→기아(17.3%)→현대모비스

△기아(17.3%)→현대제철(5.8%)→현대모비스(21.4%)→현대차(33.9%)→기아△현대차(4.9%)→현대글로비스(0.7%)→현대모비스(21.4%)→현대차△현대차(6.9%)→현대제철(5.8%)→현대모비스(21.4%)→현대차 등 47개의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배구조를 간소화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과 시장의 차가운 반응에 백기를 들고 자진 철거했다.

당시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현대모비스를 핵심부품 사업과 모듈·AS부품 사업으로 나눈 뒤 모듈·AS 부품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정 회장과 정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팔아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 정 회장의 취임과 맞물려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여건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 엘리엇이 2019년 말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빠져나간 것도 호재다.

여기에 공정위가 이달 말 정 명예회장에



서 정 회장으로 21년만에 현대차그룹 총수를 변경할 예정이어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된 만큼 국내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 같은 구조의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올해 말부터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29.99%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포

합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피하려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2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정 회장과 정 명예회장은 2015년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고 당시 각각 31.88%, 11.51%였던 지분을 30% 이하로 낮추려고 돌을 합쳐 13.39%에 해당하는 500만 주 이상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이 결과 정 회장은 약 7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번에도 현대글로비스 지분 10% 가량을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현금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이후 지분 매각으로 추가 현금을 확보하면 현재 지분

율 0.32%에 불과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영향력을 늘리거나 정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블록딜해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문이 돌며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다.

정 회장이 지배구조 정점에 오르려면 주주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일단 2018년 추진했던 개편안을 보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 전체 기업 가치의 60~70%를 차지하는 AS 부문을 분할, 상장한 뒤 이를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시나리오 등이 제기된다. 이후 존속 현대모비스가 합병 글로비스에 대해 공개 매수에 나서고 대주주가 이에 참여하는 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주주 일가→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각각 존속과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존속회사는 존속회사끼리, 사업회사는 사업회사끼리 합병하는 방안, 대주주 일가가 기아(17.2%)와 현대제철(5.8%)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해 순환출자 구조를 끊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천스닥 주역’ 동학개미, 역시나 ‘마이너스의 손’

순매수 상위 10종목 수익률, 기관 28.8%·외국인 16.8%
개인 투자자 5조5000억 쏟아부었지만 ‘-8.5%’ 체면 구겨

‘재주는 곰이 낚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코스닥 1000포인트 주역인 동학개미가 딱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5조5000억원 가량 코스닥 종목을 쇼핑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하지만 돈을 번 이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 초이후 지난 12일까지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8.5%로 집계됐다. 해당기간 코스닥 지수가 3.3% 상승했다는 점에서 지수 성과를 역주행한 셈이다. 특히 개인이 세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인 알테오젠이 연초 대비 51.4% 하락하면서 가장 안 좋은 성과를 안겼고, 삼천당제약, 셀리버리, 오스코텍 등이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해서 낭패를 봤다.

순매수 종목 중 수익을 본 종목은 CJ ENM(1.8%), 이트론(113.6%), 컴투스(10.3%)다. 이트론은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CMO)하는 업체에 투자해 최근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다. 네오이문텍, 엔비티 등 올해 상장한 종목에도 많은 매수세가 몰렸는데, 상장 당일 종가와 비교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반면 기관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이 30%에 가까운 28.8%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초 이후 가장 많이 사들인 IT부품주인 에코프로(30.5%)와 엘앤에프(33.8%)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업인 유니셈은 80% 이상 올랐다. 기관이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 중 마이

너스를 기록한 종목은 하나도 없었다.

외국인 역시 지수 상승을 초과하는 수익을 냈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6.8%를 기록했다.

에이치엘비가 3월 15일 100% 무상증자를 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를 2배로 반영했다. 외국인인 에이치엘비, 박셀바이오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냈고, 나머지 8개 종목은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프리카TV는 연초 이후 주가가 41.3% 올랐다. 카카오킴즈 역시 19.1%, 스튜디오드래곤은 12.2% 상승했다. 원자핵미경 전문업체인 파크시스템스를 통해 47.4% 수익을 거뒀다.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끈 강세장 속에서도 수혜는 개인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이 누린 모양새다. 연 초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841억 원, 2조 9834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울 때 개인은 5조3389억 원을 순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손영지 기자 eom@

중간지주사 기대감 SKT ‘52주 신고가’

장중 주가 30만1500원 터치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따라
SK텔레콤도 오늘 자체 논의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자 SK텔레콤 주가가 강세를 달렸다. SK텔레콤이 중간 지주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1만7000원(6.01%) 오른 30만 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주가는 30만15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다. 같은 시각 SK는 4000원(1.35%) 오른 29만9500원을 기록했다.

SK그룹은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만들어 그룹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도 오늘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논의한다.

시장에선 SK텔레콤을 인적분할해 통신과 반도체를 담당하는 두 회사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인수합병(M&A)을 하기 위해선 피인수(손속회사)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할 뒤 중간지주사와 SK그룹 간 합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 지분을 20.1% 보유한 최대주주다.

박정호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 시가총액이 25조 원이고 (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100조 원인데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안 된다”며 “우리의 자산구조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쉽게 바뀌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시기와 방법론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SK그룹과 합병보다는 인적분할 방안이 SK텔레콤 기업가치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기대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존폐기로 선 쌍용車 상폐 이의신청서 제출

이번 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쌍용자동차가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내면서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쌍용자동차가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과 관련해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키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규정상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

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하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이에 쌍용자동차는 최근 자산과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4025억7000만 원(정부보조금 차감 후 금액)이었으나 재평가 결과 6813억7000만 원으로 늘어 2788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쌍용자동차의 자본 잠식률은 111.8%로, 자본 총계는 -881억 원이었지만 이번 자산 재평가로 자본금이 1907억 원으로 늘어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구성형 기자 car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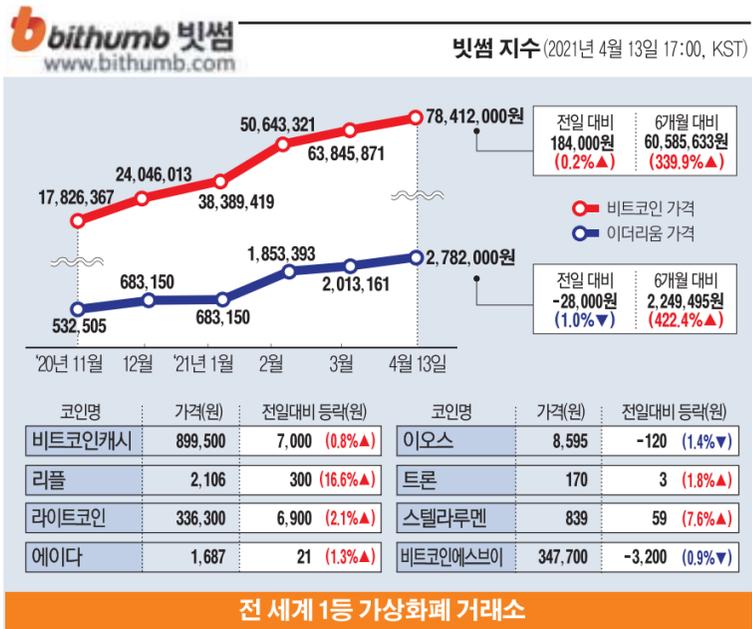
삼성전자 13兆 배당금 풀린다

삼성전자가 16일 '사상 최대' 규모인 13조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특히 7조7000억 원을 가져가는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결산배당에서 기존 결산 배당금인 보통주 주당 354원(우선주 355원)과 특별배당금 주당 1578원을 지급한다.

보통주 투자자라면 주당 1932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결산배당과 특별배당을 합쳐 총 13조1243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최대주주인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1조 원을 넘는다.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도 1조 원 이상의 배당금을 얻게 됐다. 외국인인 7조740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갈 것으로 보인다.
손영지 기자 eom@



“한강변 단지 잡아라” 건설사 ‘재건축 새판 짜기’

오세훈 시장 ‘35층 룰’ 등 규제 풀어 민간공급 활성화 기대감
건설사들 주요 사업지 물밑작업 시동 ‘수주 경쟁’ 치열할 듯
및 ‘용적률 완화’ 시의회 설득 과제... 정부와의 갈등 변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선언하면서 건설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우회기로 수주 보려고 개를 꺾어 온 건설사들은 당분간 서울시의 주택 공급 ‘새 판 짜기’를 예의주시하며 수주 경쟁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취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문했다.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자신의 1순위 공약이었던 ‘스피드 주택 공급’ 실행계획을 위한 법규와 절차 등을 점검해달라는 지시였다.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전 내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에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강변 ‘35층 룰’ 완화도 간판 공약이었다. 시장에선 딱 막혀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호가와 실거래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건설업계는 서울시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그간 서울 재건축·재개발 수주시장은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사업 집중, 현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에 막혀 씨가 말라왔다. 지난해 용산구 한남3구역(1조7000억 원)과 서초구 반포주1단지 3주구(8087억) 등의 대어(大魚)가 수주시장에

주요 대형 건설사 서울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단위: 억 원, 2020년 기준)



나오면서 일부 건설사들은 숨통이 트였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수주년에 시달려야 했다. 건설사들이 지난해 지방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 쪽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맞춰 정비사업 조합들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건설사들은 시공권 확보를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면 주요 사업지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지별 동향 모니터링, 설계 등 맞춤형 아이템 구상 등으로 수주전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뛰어난 주요 사업지를 중심으로 사전 물밑 작업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강변 35층 룰 완화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광창석 도시외공간대표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정비사업을 거치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 브랜드 홍보 효과도 특출히 누릴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09년당시 오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계획으로 추진한 정비사업이다. 당시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기여) 비율을 25%로 늘리는 대신 최고 50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이 시작되고, 35층 룰에 막혀 사업이 멈춰섰다. 정비업계는 이 곳이 35층 규제에 사업이 막힌 대표적인 곳인 데다 과거 오 시장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 권한의 한계로 규제 풀기가 얼마나 속도를 낼 지 판단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가 35층 룰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일단 용적률을 높이려면 서울시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전체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또 시 차원에서 용적률을 완화한다 해도 정부가 정책 키키를 쥐고 있어 얼마나 민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한남3구역 감평 결과에 조합원-시공사 ‘희비’

3.3㎡당 4454만원... 서울시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비싸
조합원 추가 부담금 낮아져, 시공사는 사업비 증가 부담

재개발 대어(大魚)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정비업체가 들썩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남3구역은 지난 9일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뒤 이날부터 6월 7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에 돌입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나면 내년 3월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한남3구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3.3㎡당 평균 4454만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실제로 종전자산 총계는 5조2065억 원에 달했다. 개별 감정평가 금액은 최고 383억7827만 원에서 최저 14만 원까지 다양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종전자산이 높게 평가받은 이유는 공시지가 및 집값 상승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결정하는 주요 잣대다. 추가 부담금은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

을 말한다. 권리가액이란 종전자산에서 추정 비례율을 곱한 것으로, 한남3구역의 경우 비례율이 100.19%다.

예를 들어 조합원 A 씨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10억 원이라면, 권리가액이 10억 19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98㎡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조합원 분양가가 14억8000만 원이므로, 여기서 10억190만 원을 뺀 4억7810만 원이 추가 부담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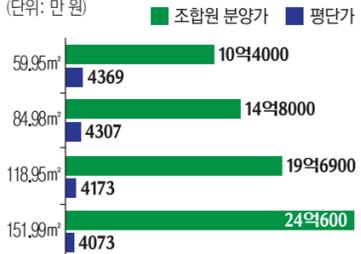
조합원 입장에선 자신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높게 책정돼야 유리하다. 그래야 분양을 신청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남3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로서는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기본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이외에 추가 이주비 LTV 60%를 책임 조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게 나오면



한남3구역 조합원 분양가 (단위: 만 원)



서 대출 금액도 증가하게 됐다. 현대건설 입장에선 그만큼 기타 사업비(이주비 대출 등)가 늘어 총 사업비 증가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도 입주 1년 후 100% 납부 조건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인천 부동산 ‘잘 나가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5.37% 서울의 5배

인천 아파트값이 오름세가 가파르다. 올해 상승률이 서울의 5배를 넘어섰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5.37%로, 서울(1.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인천 연수구는 3개월 새 아파트값 상승률이 10%를 기록하며 인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인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것은 개발 호재와 교통망 확충 등에 힘입어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 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또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동안 인천은 덜 올랐다는 인식도 많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시장에서도 이를 반영해 신고가 거래 사례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진해모로’ 전용 84㎡형은 지난달 31일 6억7500만 원에 팔렸는데, 1년 전(4억5000만 원)과 비교하면 2억2500만 원 올랐다.

송도동 ‘송도 SK VIEW’ 전용 84㎡형도 지난달 6일 9억5000만 원의 신고가에 매매됐다. 직전 신고가가 2월 19일 8억5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새 1억4500만 원이 오른 셈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인천 집값 상승세가 깜짝 놀랄 만큼 거세다”라며 “전세난 심화로 서울에서 세를 살던 임차인들이 많이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상가 투자 수익률도 ‘수도권 1위’

주택시장 규제 ‘풍선효과’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 (단위: %, 2021년 3월 기준)

올해 서울·수도권에서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 1위 지역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지역보다 인천 오피스텔의 매매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인천 오피스텔 평균 투자 수익률은 5.16%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4.33%)과 경기(4.78%)보다 높은 수치로 수도권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평균 수익률은 4.77%였다.

인천은 상가시장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인천지역 중대형상가소득 수익률은 1.06%로 경기(1.05%)와 서울(0.7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를 이어나가면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 출처: 한국부동산원, 상가정보연구소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건수는 1만2662건으로 전년 동기 1만342건 대비 22.4% 늘었다. 전체 거래 가운데 58%가 수도권에서 거래됐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3782건)로 조사됐다.

조חק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인천은 상가와 오피스텔 매매 금액이 서울과 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非규제·착한가격·혁신설계 3박자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30개 동 3200가구 대단지
분양가 3.3㎡당 800만원대

(주)한양이 충남 천안시 풍세지구에 짓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아파트를 분양한다. 천안시에서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 지역에 조성된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차별화된 혁신설계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30개 동, 전용 59~84㎡ 총 3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54가구 △75㎡ 524가구 △84㎡A 463가구 △84㎡B 499가구 △84㎡C 584가구 △84㎡D 576가구다.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전



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혜택도 제공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00만 원대로 책정됐다. 전용 59㎡형은 1억9000만 원대, 전용 75㎡형 2억4000만 원대, 전용 84㎡A·B형 2억9000만 원대, 전용 84㎡C·D형 2억7000만 원대다.

단지 내부에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남·여 독서실,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조경설계로는 수공간과 휴게공간, 놀이터

등이 연계된 대규모 커뮤니티 광장을 비롯해 유아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꾸며진다.

주변 교통 여건도 좋다. KTX와 SRT, 지하철 1호선을 동시

에 이용할 수 있는 KTX천안아산역을 이용하기 쉽다. 경부고속도로와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평택고속도로(2023년 개통 예정), 43번 국도(세종로)는 물론 평택항 및 청주공항 접근성도 뛰어나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주변에 풍세초, 용정초, 광풍중을 비롯해 단국대와 호서대 아산캠퍼스가 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의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마련돼 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기고문에 ‘피해 호소인’ 9개월째 그대로

지난해 7월 언론사 인터넷에 게재된 박원순 추모 기고문서 사용 피해자 측 공개사과 촉구... 조 교육감 “수정 요청 여러 번 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만나 일상 복귀 지원을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에 힘쓰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언론사 기고문이 수개월째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은 13일 “(해당 언론사에)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 호소인’ 자체로 2차 가해=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3일 한겨레 인터넷판에 실린 ‘늘 부끄러움 안겨주던 40년 친구 박원순을 기억한다’는 제목의 추모 기고문

에서 “나는 오랜 벗이자, 40년을 같이해온 동지로서, 형언할 수 없는 마음으로 모든 정념을 다해 내 친구를 애도한다”며 “부디 이 절절한 애도가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자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또 “고인은 과거 각종 인권 사건을 벌인 하면서 ‘늘 피해자의 편에 서고 그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런 그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 피해 호소인의 신상 털기와 비난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호소

인’ 명칭은 자체로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앞장서 불렀던 고민정·진선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박영선 전 후보 선거캠프에서 사퇴했다. 박 전 후보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접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진심어린 사과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많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도 대다수”라며 “교육에 책임 있는 사람(조 교육감)이 피해자를 지칭하는데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호소인’이라는 부적절한 명칭으로 피해자를 지칭해서 격하시켰다. 공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조치”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조 교육감이) 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조 교육감이)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학생·교직원 대상 2차 가해·피해 예방교육’과 ‘성인지 관점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기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호하게 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쓴 조 교육감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2차 가해·피해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고문을 당장 수정하거나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미 지난 사안”이라면서도 “(기고문) 이후부터는 계속 피해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겨레 (오피니언 팀에) 기고 수정 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주장했다.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기고 수정 요청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한겨레 측에 해당 기고 수정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해당 기사는 박 전 시장 유고 직후에 나온 기고문이다. 사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글”이라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지자체장·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투톱’

공직자 중 혐의 비율 가장 높아 9년 만에 이해충돌법 통과 눈앞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최고 집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순으로 집계됐다. LH직원은 38명이었다. 하지만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자체장(4.1%)과 국회의원(1.6%), 지방의회 의원(1%)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LH는 수사를 받는 직원이 전체 임직원(9500명) 중 0.4%에 불과했다.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쏟아진 각종 대책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혹을 파헤치고 비리를 차단

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된 셈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당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1호로 삼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노력과 국민의힘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대부분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점을 찾았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관련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에 대



‘K-POP 한복’ 살펴보는 외국인들

1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케이팝X한복’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케이팝 스타들이 착용했던 한복을 둘러보고 있다.

1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케이팝X한복’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케이팝 스타들이 착용했던 한복을 둘러보고 있다.

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

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9년째 표류 중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성운 1분기 업무추진비 1352만 원... 전액 식사비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의 1분기 업무추진비가 135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 지검장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1352만 8000원이다. 이 지검장은 차·부장검사, 전입·출검사, 공판·총무과·검사장비시설간담회 등 중앙지검 직원들과 돌아가며 50차례 식사 자리를 가졌다. 현안 회의나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대외 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없었다. 지난해 중앙지검 검사들로부터 용퇴 건의까지 들으며 리더십에 금이 간 이 지검장이 조직 신망을 얻기 위해 내부 결속에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 전까지 업무추진비로 216만8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업무추진비로 12차례 전입·출자, 직원 격려 오찬 등 식사를 했고 5번의 현안 회의에 총 56만7000원을 썼다. 세월호 수사팀 격려 비용으로는 12만 원을 집행했다. 김충용 기자 deep@

재미

공감

즐거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채널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채널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채널 TV)

swanicoco
NATURAL COSMETIC

겉과 속 2중 잠금으로 눈에 보이는 동안 피부

SWANICOCO ORIGINAL PURE AMPOULE

EGF & FGF 퓨어앰플

10ppm 99% 고함량 앰플
피부 흡수 촉진 기술 적용



스와니코코 전속모델 문예원

Charlotte
문예원

“미래지향적 금융지원으로 혁신기업 성장 뒷받침”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거래 중소기업 방문

여신·투자·컨설팅 통해 위기 극복 ‘금융 주치의’ 역할 다짐 업체 대표들 “투·융자 복합, 저리 IP 금융지원 활성화” 요청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13일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들의 지원 방안에 대한 애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거래 중소기업들을 방문했다. 윤 행장은 이날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 ‘에스에이티’와 산업용 드론, 해상인명구조용 드론, 드론 관제 시스템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숨비’를 방문했다.

에스에이티는 2차전지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기업은행에서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받았다. 소재 개발에 성공해 현재 양산을 앞두고 있다. 소진석 에스에이티 대표는 “기업은행의 저리 IP 금융 지원을 통해 에너지 사업 연구·개발(R&D)에 힘을 쏟을 수 있어서 회사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숨비는 2019년 기업은행의 모험자본 투자를 받아 유인 드론(PAV) 상용화를 위

한 순수 국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오인선 숨비 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여신 구조와 금융지원 방식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행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지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그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건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시적 유통성 위기를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혁신 컨설팅으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윤종원(오른쪽) IBK기업은행장이 13일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에스에이티에 방문해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윤 행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경남 창원, 부산 지역을 찾아 거래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당시 윤 행장은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제조업체 ‘태림산업’의 스마트 공장을 방문해 기업 현황과 애로 사항을 들었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 필요한 실질

적인 지원 방안을 듣기 위함이었다. 그는 당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신, 투자, 컨설팅 등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하도록 금융 주치의로서 역할과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김성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SID 최고권위상 수상자 선정

삼성디스플레이는 김성철(사진)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이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가 수여하는 2021년 ‘칼 페르디난드 브라운상(The Karl Ferdinand Braun Prize)’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김성철 사장은 LTPS 기반의 고해상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대량 양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세계 최고 권위의 디스플레이 학회인 SID는 브라운관 TV를 발명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칼 페르디난드 브라운 박사를 기념해 1987년부터 상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SID는 김 사장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터치 내장형 OLED를 통한 패널의 슬림화, 구부러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시블 OLED 개발, UTG를 적용한 폴더블 OLED 양산 등을 대표적인 성과를 꼽았다.

김 사장은 경희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OLED 개발실장, 디스플레이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중소형 OLED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5월 17일부터 시작되는 ‘SID 디스플레이 위크(Display Week)’ 기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우리 기자 wei1228@

KB증권, 베트남 호찌민시에 해외 네번째 무지개교실 개관



KB증권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국내 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넘어 해외 네 번째, 베트남에는 두 번째의 초등학교 ‘무지개교실’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9일 개관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무지개교실’은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KB증권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해 이번 베트남 ‘무지개교실’까지 국내외 총 19개소를 개관했다. <사진>

이번 베트남 ‘무지개교실’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빈탄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이주민 인구 급증에 따른 교육시설이 부족해 학급 과밀화 현상이 높은 곳이다. KB증권은 이곳에 약 9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 1동을 신축하고 도서 약 1만 권과 지능형 환기 시스템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오스카 시상식 가려는데 중요범죄 때문에 아들이 걱정”

윤여정, 포브스와 인터뷰...봉준호 감독도 시상자로 참석

배우 윤여정(왼쪽 사진)이 오스카 시상식 참석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에 사는 아들이 아시안 중요범죄 때문에 자신의 미국 방문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털어냈다.

윤여정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제 두 아들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아들이 오스카 시상식을 위해 미국에 가려는 나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들은 ‘길거리에서 어머니가 다칠 수도 있다. 어머니는 노인이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중요

범죄 가해자들)은 노인을 노리고 있다”고 염려했다면서 아들이 경호원 필요성까지 얘기했다고 전했다. 윤여정은 “아들은 내가 (중요범죄) 공격을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카데미는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과 ‘미나리’에 함께 출연한 한예리에게 시상식 참석을 요청했고, 두 배우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영화 ‘기생충’으로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봉준호(오른쪽) 감독이 올해는 오스카상 무대에 시상자로 다시 오른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은 같은 날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등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연출진이 일부 공개한 시상자 명단에 봉 감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시상식에는 지난해 오스카 연기를 받은 호아킨 피닉스(남우주연상), 러네이 젤위거(여우주연상), 브래드 피트(남우조연상), 로라던(여우조연상) 등도 관례에 따라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25일 열리며 ABC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25개국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

로이터통신, 170년 역사 첫 여성 편집국장 내정

伊 출신 47세 알레산드라 갈로니

로이터통신 1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편집국장이 탄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스티븐 J. 애들러 편집국장을 대신해 알레산드라 갈로니(47·사진)가 편집국을 이끌 예정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갈로니는 4개 국어를 구사하며 정치부와 산업부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다. 그는 로이터통신에 들어가 전까지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일했다.

로이터통신은 갈로니가 평소 동료에게 편집국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레피니티브는 로이터통신 모회사인 톰슨로이터의 금융-리스크관리 사업부가 독립해 만든 업체다.



과거로이터통신 모회사인 톰슨로이터의 일부였던 레피니티브는 지난해 매출 6억2800만 달러(약 7069억 원)의 절반을 지불할 로이터통신의 최대 고객사다. 레피니티브는 2019년 8월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에 인수됐는데, 이때 로이터통신은 레피니티브에 뉴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적어도 3억3600만 달러(약 3780억 원)를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다날엔터테인먼트, 임유엽 대표

다날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유엽 음악사업본부 본부장을 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날그룹 ‘최초 여성 CEO’에 오른 임유엽 신임 대표이사는 1983년생으로, 2009년 다날 사원으로 입사해 2012년 다날엔터테인먼트 분사 이후 독점 유통 음원 목표 달성, 중국·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 등 독보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는 음악사업실장, 음악사업본부장직을 역임하는 등 탄탄한 실무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춘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고종민 기자 kjm@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분청 비서관 채봉규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손문갑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성훈 △관세청 이근후

◆한울바이오파마 △미국법인임상운영 담당 부사장 데이비드 헤르만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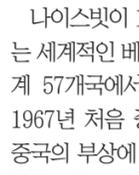
◆조선일보 △논설위원 선우정 △뉴스총괄 에디터 조중식 △디지털콘텐츠기획 및 외교에디터 강인선 △사회부장 최원규 △국제부장 이하원

◆아시아경제 ◇승진 △미디어기획실 조병무(부국장) △편집국 강희중 박혜숙 △미디어기획실 마케팅팀 박승규(이상 부장) △편집국 서소정 배경환 성기호 김현민 △디지털뉴스본부 오성수(이상 차장) ◇보임 △미디어기획실 기획팀장 박재은

베스트셀러 ‘메가트렌드’ 쓴 미래학자 존 나이스밋 별세

베스트셀러 ‘메가트렌드’로 유명한 미국 미래학자 존 나이스밋이 8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2세. AP통신에 따르면 나이스밋의 아내 도리스는 그가 오스트리아 비르테르제 호수 근처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10일 밝혔다.

나이스밋은 1929년 1월 15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고 하버드대, 코넬대, 유타대에서 공부했다. 그는 해병대에서 복무한 뒤 이스트먼 코닥과 IBM에서 경영인으로 일했고, 1963년부터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나이스밋이 1982년 저술한 메가트렌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이 책은 전 세계 57개국에서 1400만부 이상 팔렸다. 1967년 처음 중국을 방문한 나이스밋은 중국의 부상에 주목했다. 이후 ‘나이스밋 중국연구소’를 설립하고 텐진대, 난카이대, 난징대 등에서 교수로도 활동했다. 정 보사회로 이행, 여성 지도자의 탄생, 아시아의 도약 등을 예견하기도 했다.

2000년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도리스와 결혼한 나이스밋은 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생활했다. 도리스는 “나이스밋은 선견 지명이 있고 개방적이었으며, 편견이 없고 주류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았다”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나이스밋 부부는 슬하에 자녀 5명과 손주 12명을 뒀다.

부음

▲이병숙 씨 별세, 묵은정 씨 부인상, 묵현상(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인남(화가)·인희(서울대 의대 교수) 씨 모친상, 박은교(진천 나우미션 목사)·정민환(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씨 장모상 = 1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2-2072-2011

▲최영민 씨 별세, 지은아(부산불교방송 편성제작팀장) 씨 모친상, 류치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장) 씨 장모상 = 13일, 부산시민장례식장 401호,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강근호 씨 별세, 강두순(매일경제신문 증권부 차장) 씨 부친상 = 1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02-3010-2000

유럽은 지금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프랑스 ENA 폐교, 다양성 가치 추구를 위하여

<국립행정학교>

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의 상징인 국립 행정학교(ENA)가 2022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ENA는 프랑스 엘리트 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ENA는 2차 세계대전 후 국가를 재건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건립 이후 학령기를 보낸 5명의 프랑스 대통령 중 현 마크롱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이 ENA 출신이며, 이 외에도 정·재계 리더들을 배출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랑제콜(Grandes écoles: 고등교육기관)'이다. 한 해 100명 미만의 소수정예로 양성되는 ENA 출신들은 '에나르크(enarque)'라 불리며 일정 기간 공직에 근무해야 한다. 이들 에나르크는 졸업 후 우리나라로 치면 서기관 정도의 직급에 임용되며, 사회 요직으로 진출해 왔다.

이와 같이 프랑스 사회가 극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조직될 수 있었던 배경을 돌아보면, 프랑스 대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 이전 시기 대학은 가톨릭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왕권과 귀족 나아가 교회까지 혁명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은 마비되었다. 이에 혁

명정부는 대변혁을 딛고 나라를 이끌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재원을 양성하고자 그랑제콜 체계를 조직한 것이다. 혁명정부는 가문과 배경을 배제하고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아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우수한 엘리트 집단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18세기 유럽대륙의 정치철학 또한 절대주의 및 중상주의를 배격하고 계몽주의 나아가 기능주의 사조로 흐르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의 기능주의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기술관료) 집단에 의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정치와 경영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아래에서 프랑스에서는 세분화·전문화된 분야의 소수 그랑제콜 출신 엘리트 집단의 활약이 요구되었다. 프랑스의 독자적 기능주의는 과학, 기술,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강한 신뢰감이 반영된 특징을 가진다. 68혁명 이후 프랑스 내 일반 대학 전체가 평준화되어 위계서열은 사라졌으나, 그랑제콜 진학을 위한 소수 상위권 그룹의 극심한 경쟁은 지속되어 왔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모교인 ENA의 폐교를 단행한 배경에는 2018년 10월 이후 확산된 '노란조끼' 시위대의 불평등 해소

촉구가 있다. 당시 경유세 23%, 휘발유 15%의 유류세 인상이 발표되자 불황에 고통을 겪던 서민들은 불만을 집단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교통사고 시 긴급상황임을 알리는 용도로 노란조끼의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노란조끼 시위는 운전자들의 대(對)정부 항의인 것이다. 도심에서 다소 먼 거리에 거주하며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유류세 인상은 고통이었다. 유류세 인상이라는 단일한 이슈만으로도 장기 불황과 양극화에 켜켜이 쌓였던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정부는 곧바로 인상 계획을 철회하였으나, 유류세 이외의 사회문제에 관한 시위의 요구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사회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대해 온 민중은 이른바 '노란조끼형' 저항을 통해 적극적 변화를 요구했다. 전세계적 현상이 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시위를 일상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 지속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보건방역 및 집중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선을 1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 서비스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ENA의

폐교를 공식화하였다. 즉 시위대가 요구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의 건강한 가치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엘리트주의 산실인 ENA부터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ENA는 그동안 철저히 실력 중심으로 입학생을 확보해 왔다고 주장해 왔으나, 학생들의 부모가 대부분 고위공직자이거나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특권층에 속하며 노동계층 배경의 출신자가 1%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받아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계층 간 이동성이 필요하며, 미래의 지도자 집단은 주요 직책에 오르기 전에 현장과 지역 기관에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경제학자 스콧 페이지는 "다양성이 능력보다 중요하다(Diversity trumps ability)"고 하였다. 현재 각국 사회는 계층, 지역, 인종, 이문화(異文化), 연령 등 집단 간 반목과 차별,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다양성 가치의 추구를 위한 프랑스의 선택은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계층 간 이동성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격차 해소 및 사회가치와 정의의 복원이라는 개혁에 가닿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의 건강한 가치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엘리트주의 산실인 ENA부터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계층 간 이동성이 필요하며, 미래의 지도자 집단은 주요 직책에 오르기 전에 현장과 지역 기관에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다양성 가치의 추구를 위한 프랑스의 선택은 시작되었다. 격차 해소 및 사회가치와 정의의 복원이라는 개혁에 가닿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방로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식이 다르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생산요소와 자산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가진다. 만인이 찬성하는 토지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토지제도를 잘못 건드려 망한 나라는 무수히 많다. 1950년대에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통적인 지주와 소작인 제도가 사라진 농지개혁은 1950년 4월 시행되었다. 두 달 후 6·25 전쟁이 터졌다. 전쟁 중에도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 나라를 지켜냈다.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정책은 춤을 추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와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 이제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절망적인 세상이 되었다. '헬조선'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고,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희망도 비전도 사라졌다.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주택정책은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로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시시콜콜한 세부사항까지 정하면 시장은 더욱 경직되고 편법이 판을 친다. 지난 50년 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잘 말해 준다. 정부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큰 틀을 만들자. 소유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해방 직후의 시대정신에 따라 제헌 헌법에서부터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수립됐다. 시대정신이 반영되었기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자작농은 14% 정도에 불과했고, 전국 토지의 80%를 소유한 지주들의 토지개혁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다. 산업화, 도시화로 농민이 증가하고 상승속도 많아짐에 따라 토지제도에 많은 예외를 두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도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단서 조항을 달았다.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법

률이 정하는 예외를 두었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1996년 시행된 농지법도 많은 예외를 두었다.

토지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것은 청년과 기성세대가 공동으로 가지는 시대정신이다. '토지공개념'도 제기된다.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농지제도를 개혁하자고 하면서 강력한 대책도 제시한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원천금지, 농업진흥지역 전용 불가, 부채지주 농지 강제처분, 조세상 특례 폐지, 각종 농지 소유 예외조항 폐지, 농지관리 기능 강화 등이 논의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농업 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농지를 가지고 투기하거나 장난치지 말라"는 말은 농업계의 오래된 염원이다. 부동산 대책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걸어야 한다.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제임스 브랜치 캐빌 명언 "낙관론자는 우리가 최고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비관론자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미국 소설가. 중세 프랑스의 가공의 나라 창시자와 후손들을 묘사한 '매뉴얼 일대기'는 10여 권에 이르는 대작으로 그의 대표작이자 출세작이다. 오늘은 그의 생일 날. 1879-1958.

☆ 고사성어 / 사회부연(死灰復燃) '사그라진 재에 다시 불이 붙었다'는 말. 잃었던 권세를 다시 찾거나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한다. 사기(史記) 한장유열전(韓長孺列傳)에 나온다. 한(漢)나라의 관리 한안국(韓安國, 자는 長孺)이 투옥되자 옥사쟁이 전갑(田甲)이 그를 모욕했다. 한안국이 "다 타버린 재에서도 다시 불길이 살아나지 않는가[死灰獨不復燃(然)乎]"라며 잃어버린 권력과 세력을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전갑은 "다시 불이 타면 오줌을 싸서 끄겠다[然即灑之]"며 비웃었지만 훗날 풀려나 벼슬에 오른 그는 전갑을 용서했다.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 산업의 초기에는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돼 급속한 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이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서 루이스가 제시했다.

☆ 고운 우리말 / 여줄거리 중요한 일에 딸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을 말한다.

☆ 유머 / 나를 키운 아내 퇴직하고 집에 아내와 같이 있게 되자 잔소리가 부쩍 늘었다. 아무래도 지적을 좀 해야겠다 싶어 한마디 하자 아내의 대꾸. "내가 시투에 몰 주듯 잔소리를 꾸준히 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라도 사는 거예요. 당신은 매년 흘러 들었지만 콩나물은 지랐잖아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저수첩

서지연 금융부/sjy@



길어진 금융위 안전소위, 누가 이득인가

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답답지 않은 표정이다. 금융위 제재심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재차 검토하는 건 금융위 제재심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금융위는 금융위가 정한 제재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내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금융위가 결정한 제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한 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안전소위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금융위 안전 소위가 길어지는 걸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혹여라도 길어지는 안전 소위가 전담팀 마련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이렇

게 되면 앞으로 금융위가 올리는 징계수위를 모두 따져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금융위의 상위 조직인 금융위가 윤석현 금융위원장의 전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이 같은 기류에 남몰래 웃는 곳은 금융사다. 금융위가 의도했던 안 했던 징계를 막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금융사와 맞아떨어져 버린 것이다. 최근 금융위 안전 소위가 길어지고 있는 건 금융사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이에 대한 증거까지 확보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위가 금융사들의 목소리를 들어 안전 소위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금융 피해자들의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사의 목소리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재차 들길 바란다.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의 안전 소위 절차가 길어졌다. 금융위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전 소위는 보통 안전당 한두 번 열리는데, 삼성생명만 두 차례 소위에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앞서 라임 사태 안전 소위도 3차까지 개최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의 금융회사 징계에 대한 태도가 보다 신중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금융위의 중징계가 잦아지니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의 CEO 중징계에 대해 "(판사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찬스'

이르면 다음 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될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줬으면, 아니 권권자의 자격으로 반드시 해내라고 요구하고 싶은 임무가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종전선언 등 하고 싶은 일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일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글로벌 제약회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덕분에 백신 확보 물량이 넘쳐난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이 손에 쥔 백신은 4억5000만 명분에 달해 "남아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부작용 문제가 부각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수석 의학과 문이 "미국은 AZ 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향후 기존 백신을 보강하기 위한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고려해도 확보 물량이 넉넉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남아도는 백신을 그냥 썩힐 생각이 없어 보인다. 파우치 박사의 발언이 있기 이틀 전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외교' 책임자를 임명했다.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게일 스미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을 전 세계 백신 공급확대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앉혔다. 물론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돕는다는 인도주의에 근거한 조치지만 외교가에서는 미리 백신 외교를 선점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미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등을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중국산 백신을 제공하며 포섭에 나섰다. 물론 한국에도

데스크칼럼

정 일 환

정치경제부 부장



손을 뺐은 상태다. 3일 있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회담이 끝난 뒤 중국은 한중 양국이 이른바 백신여권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발표문에서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발표문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었고, 외교부는 "실무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정부가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중국산 백신을 국내에 들여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테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러브콜을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밀당' 카드로 써먹을 기회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싶어 반가운 생각이 든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니 두 나라의 백신 외교 경쟁을 잘 활용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문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버겁다면 도움을 요청해 볼 만한 정황들도 포착된다. 예컨대 삼성은 화이자와 남다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녀가 화이자 가문의 손녀와 파티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적으로 회자될 정도다. 친구끼리 전화 한 통쯤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손녀딸 부탁에 녹아내리지 않을 강철인간 할아버지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게다가 미국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강렬히 원하고 있으니 어쩌면 백신 후진국을 탈출하려면 신이 한국에 내려준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걱정은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걱정 말라" 하는 걸 보니 큰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난 연말 문 대통령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통화했다며 2분기에 2000만 명분의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자신감과 현실이 거꾸로 가는 현상은 비단 백신뿐 아니다. 작년 이맘때 문 대통령이 "마스크는 충분하니 약국에 가서 확인해 보라" 하자 곧 마스크 대란이 났다.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라 하자마자 대유행이 찾아왔다. "남북 관계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더니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호언하자 대폭등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종전선언을 설득할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돌아오는 문 대통령이 빈손일까 걱정이다. whan@

사설

日 방사능오염수 방류, 실효적 국제대응 나서야

일본 정부가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오염수를 희석해 2년 후부터 방출한다는 계획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危害)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국민 안전과 주변 환경에도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차관들의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우리 국민 안전과 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도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국 우려와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협의와 양해도 없었던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를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노심용융(爐心熔融) 사고가 발생했고, 냉각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하루에 170톤(t)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쌓인 오염수는 현재 125만t에 이르고 다량의 핵물질들을 포함하는데, 이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발암물질이자 DNA 손상 등 인체에 위해가 큰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낮추

고, 연간 배출총량도 사고 이전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방류기간은 30~40년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확실히 처리한다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방류 후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순환해 7~8개월 이후면 제주 앞바다와 동해로 유입된다.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악영향은 4~5년 뒤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이 위험에 직접 노출된 최대 피해국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일본의 독단적 오염수 방류를 막을 방도가 없다. 국제사회는 일본 편이다. IAEA는 해양방류의 환경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검증으로 피해 발생에 대한 배상이나 방류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사후 대응이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달리 대안이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도 모두 강구해야 한다. 일본을 비난한다고 어떤 해결책도 나오기 어렵다. 우리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고 세계 해양환경에도 오랜 기간 오염을 가져오는 사안이다. 주변국에 설득력 있는 접근으로 실효적 감시체계를 갖춰 피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면서 여론을 환기하고, 가장 안전한 오염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변화 이야기 - ① 위기의 공감, 인류의 책임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제 사회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하나둘 가지 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미국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체제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2015년 파리 협약을 주도했던 미국 민주당의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새 정부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총괄하는 기후특사를 맡게 되었다. 케리 대사는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협정에 서명한 미국 대표였다. 그는 서명식에서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서명을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이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상징을 보여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역주행을 극복하였기에 향후 4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기후와 탄소의 문제는 상호 간에 어떤 인과관계인지에서 시작하여 인류의 책임에 대한 공감, 서로 다른 입장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다투고 타협하는 복합적이면서도 다면적인 사안이다. 국제 사회는 치열한 논쟁과 국가 이익을 위한 협상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파리 협약 복귀로 새롭게 출발하는 인류의 노력과 거기에 발맞추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라는 새로운 경영으로 무장한 민간 기업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일원인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이

조석의 遠見明察

(원견명찰)

현대일렉트릭 사장



야기를 시작해 본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공감과 인류의 책임'이라는 의식이다.

통계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간 지구의 표면 온도는 평균 0.9℃ 상승하였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탓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1988년 과학자들이 결성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국제연합(유엔·UN)과 협조하여 기후변화 이슈를 과학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대응하는 전기를 마련한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의 결론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그 책임의 분배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합의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류의 활동에서 기인(anthropogenic)"한다고 인정한다.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온실가스의 영향이고 온실가스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통해 배출된다. 이러한 공

감이 있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한다. 리우는 위기의 공감과 공동의 책임을 인정한 첫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리우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쟁점을 잉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차별화된 책임'의 문제이다. 모든 나라가 공동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온실가스의 감축은 구두 선언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밀접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 문명은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인다는 의미는 곧 경제 성장의 종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환경의 문제에 우선하기에 온실가스의 감축을 선뜻 약속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쟁점이 있기에 리우는 원칙의 선언에 머물렀고, 1997년 교토에서도 선진국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나머지 대부분 국가는 그러한 수치 목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협정에 서명하는 제한적 약속을 하게 되었다. 이후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2015년 파리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논리와 쟁점이 무엇이며, 대타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진료실 풍경

당신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원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미용실을 다닌다. 하고 싶은 머리 모양이 있을 때, 딱히 없을 때도 언제나 그 미용실을 간다. 한번은 머리를 기르던 중이었는데 미용실을 찾았다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고 내몰린 적이 있다. "기르고 싶다면 여기 근처에 오지 말라"고도 했다. 그 미용실 원장님은 일종의 내 머리카락 주치인 셈이다.

언젠가 미용실 의자에 앉아 그녀가 나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기분 좋은 느낌에 흠뻑 취하고 있을 때, 그녀는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다. 오랜 외상의 시간을 보내시던 그녀의 시어머니가 "나도 너처럼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싶은데 머리 모양이 말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다. 오랫동안 누워만 지내다 보니 머리카락이 빠지고 부스스해져 불품없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녀는 시어머니가 기운을 차리시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한다. 두세 시간만 앉아 계시 수 있으면 집으로 파마와 염색 도구를 모두 가져와 머리를 해드리겠다는 약속이었다. 어차피 누워서 염색, 파마를 하기가 힘들니까.

시어머니는 머느리의 약속을 믿고 조금씩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 몇 분만 앉아 있더라도 척추기립근이 약해 버티지를 못하시더니, 점차 앉아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몇 달 후에는 세 시간을 꿇꿇이 허리를 펴고 버티실 수 있게 되었다. 바르게 앉는 자세는 재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 시어머니는 바라시던 파마와 염색을 하였고, 그 후의 삶도 달라지셨음은 물론이다.

'립스틱 사인'이라는 말이 있다. 립스틱 사인은 병원에 입원 중인 여자 환자들이 몸이 나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인이라고 일컬어진다.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자기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던 여자 환자들이 입원 치료로 몸이 조금씩 나아지면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치장도 하기 시작한다고. 립스틱까지 바르기 시작하면 이제 퇴원할 때쯤이다 된 거라는 일종의 사인이다.

립스틱 사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기분이 나빴다. 성차별적이라고 느꼈다. '립스틱' 사인이라니! 아니, 여자들은 몸이 아플 때에도 립스틱을 바르고 치장을 해야 한단 말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도 자신의 단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 대체 여자들은 왜 한 자일 때조차 여성성을 지키기를 강요받는 것일까. 또 왜 여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녀의 시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다른 관점도 가지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 관리의 힘이 한 편으로 소중한 재활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립스틱만이 아닌 다양한 사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게 아닐까. 재활의 동력은 다양할수록 좋으니까.

추혜인 살림로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SAMSUNG



게임을 더 즐기고 싶다면?

Neo QLED 8K

시야를 넓혀봐

최단 인풋랙의 빠른 반응 속도와
올트라 와이드뷰의 최적화된 게임환경으로
더욱 즐거워진 홈게이밍

- 인풋랙 5.8ms, 4K@120Hz, 저시선율치
- 올트라 와이드뷰는 해당 버전을 지원하는 게임 및 PC 게임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게임 화면은 실제 게임을 연출한 장면으로, 게임바 옵션은 게임 실행 전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라이프의 중심 Neo QLED 8K